

제3의 길 이야기

마이클 노박 지음, 박종찬 역



감사의 말

이 책은 영국 경제문제연구소IEA: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의 보건복지연구실 Health and Welfare Unit에서 1998년에 출간한 『Is There A Third Way?: Essays on the Changing Direction of Socialist Thought』라는 책을 경제문제연구소의 허락을 받아 자유기업센터가 번역하여 출간한 것이다. 출판을 허락해 준 IEA 측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저자 소개

마이클 노박

마이클 노박Michael Novak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소재한 미국기업연구소AEI: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사회정책연구실장이며 동 연구소의 종교 및 공공정책분야의 석좌George Frederick Jewett Chair 교수이다. 가장 널리 알려진 그의 저술은 『민주적 자본주의 정신』(1982)으로 1980년대를 거치면서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고, 후에 미국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그가 주저자로 집필한 『가족과 복지에 관한 새로운 합의』(1987)라는 세미나 보고서는 미국 복지 프로그램 개혁에 분기점을 제공한 연구로 알려져 있으며, 이 때문에 그는 런던 소재의 경제문제연구소에서 자주 강연을 해 왔다. 노박은 신학과 경제학 부문의 독창적인 연구로 버킹엄 궁에서 종교연구를 발전시킨 것에 대해 수여하는 상인 템플턴 상을 수상하였다.

앤서니 기든스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는 런던정치경제대학LSE 학장으로서 사회학, 정치학, 사회이론 분야에서 30권이 넘는 책을 집필 또는 편집하였다. 이 책들은 22개 국어로 번역되었다. 기든스의 저작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책이 8권(이 중 하나는 4권으로 된 연구)이나 출판되었다. 최근의 그의 저작으로는 『근대성의 결과』(1989), 『근대성과 자기정체성』(1991), 『친밀성의 변화』(1992), 『좌파와 우파를 넘어』(1994), 『사회학을 위한 변론』(1996) 등이 있다. 그는 또 사회학 부문에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교재인 『사회학』의 저자이기도 하다. 기든스는 1997년 초 런던경제정치학교로 오기 전에 캠브리지의 King's College의 사회학 교수 및 연구원으로 있었다.

존 로이드

존 로이드John Lloyd는 「New Statesman」의 부편집장이며 「파이낸셜 타임즈 Financial Times」와 「스코틀랜드 온 선데이Scotland on Sunday」의 기고가이다.

그는 1998년 『민족의 재탄생: 러시아의 해부』(마이클 조셉 출판사)를 집필하였다.

폴 오머로드

폴 오머로드 Paul Omerod는 국립경제사회연구소 NIESR: National Institute of Economic and Social Research에서 학술적인 차원의 미래예측을 하다가 1980년대 초에 그의 동료들과 함께 헨리 미래예측센터 Henley Center for Forecasting를 만들면서 민간부문으로 옮겨갔다. 1990년대 초에 센터는 WPP 그룹에 팔렸고, 1995년 이후 오머로드는 고전파 이후의 경제학 모임 Post-Orthodox Economics의 의장이 되었다. 그의 책 『경제학의 죽음』(파버 앤 파버 출판사)은 1994년에 출판되었고 10개 국어로 번역되었다. 그 후속 편 『떠도는 경제학 Butterfly Economics』이 1998년 11월 출간되었다.

훔 어 보 기

유럽에서 제3의 길이라는 것은 기존의 좌파 이데올로기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우파적 수단을 수용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레토릭(修辭)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우려스럽게도 한국에서는 제3의 길이 좌파의 무오류를 입증해 주는 보증수표와 같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현상을 시정하는 데 이 책의 의의가 있다. 이 책에서 마이클 노박은 우파적 입장에서 전후 복지체제가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잠식시키고 시혜적 국가를 제도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의존성과 도덕적 타락을 조장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 집중된 권한을 시민사회로 양도하는 민주적 자본주의를 제시한다. 이러한 노박의 주장에 대해서 앤서니 기든스, 존 로이드, 폴 오머로드와 같은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처음에는 노박을 강하게 비난하지만 결론에서는 “우파”인 노박의 견해를 상당부분 수용하고 있다.

노박에 따르면 사회주의 붕괴 이후 사회민주주의의가 추진해온 복지체제는 이념적·현실적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여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과거의 처벌적인 재분배주의에서 벗어나는 한편 국민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보모국가Nanny State로부터도 벗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목적—평등, 고통에의 동참, 빈곤층에 대한 배려 등—마저 포기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고유한 목적을 유지하는 한에서 새로운 수단, 즉 우파적인 방법들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직면하여 유럽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비관론이 일어나고 있다. 세계화라는 흐름에 의해 전후 유럽에서의 체제 안정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사회적 기반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와 대조적으로 낙관론이 자주 들리고 있다. 미국인들이 나타내는 낙관론의 근거는 바로 세계화이다. 세계화라는 흐름이 유럽에서는 비관적인 전망의 근거로, 미국에서는 낙관적인 전망의 근거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라는 흐름 속에서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문화적 위기이다. 군나르 미르달 Gunnar Myrdal은 복지제도로 인해 스웨덴 사람들의 도덕성이 약화되었다고 선언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보조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폭력범죄, 사생아 수 등 사회병리 현상도 급격하게 증가했다. 유럽과 미국의 정책 전문가들이 복지국가의 재정적 위기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지만, 보다 심각한 것은 바로 복지국가의 정신적 위기이다.

복지국가가 가져온 문제점은 첫째, 개인의 책임이라는 주체성이 메말라 가면서 궁극적으로는 복지국가의 ‘나태함’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 둘째, 행정국가가 시민사회에

의해 수행되어 오던 대다수의 기능들을 꾸준히 잠식해 버려 시민사회의 보조기구로서 국가라는 원칙이 침해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제도로 인해 가장 나쁜 영향을 받은 것은 가정생활이었다. 복지제도는 사람을 의존성의 굴레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버렸다. 이러한 굴레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공공기금에 의존하는 경향을 버리지 못하며 그들의 자녀들도 이러한 경향을 그대로 물려받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서는 약 400만 명의 빈곤층들이 이러한 의존성의 굴레에 빠져 있으며 가난에서 벗어날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국가가 공동선을 위한 유일한 도구도, 최선의 도구도 아닌 것은 명백하다. 전체주의 국가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도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는 못했다. 따라서 국가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자유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자유사회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현명한 시민들이 자유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공동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정부를 형성하고자 하는, 자치정부를 위한 구상이다. 자유사회에서 시민들은 수많은 자발적인 단체들을 구성하여 시민사회를 이끌어 나간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민들은 엄격한 경제적 책임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 상상력, 창의성, 주도성이 있는 시민이 됨으로써 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훌륭한 인적 자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사회가 되기 위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것은 집권화된 관료체제가 맡고 있는 임무를 시민 각자에게, 그리고 그들의 다양한 단체에게 양도하는 일이다.

이러한 양도에는 일곱가지 원칙이 적용된다. 첫째, 전체를 포괄하는 자치정부라는 역사적 목표를 성취하는 일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시민을 기를 필요가 있다. 둘째, 튼튼한 가정을 가꾸는 일이 대단히 효율적이다. 책임있는 시민을 키우는 곳이 바로 가정이다. 셋째,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주도성, 창의성, 기업가 정신이라는 개인적 습관을 배양하는 일이 중요하다. 넷째, 창조성을 고양하기 위해서 모든 가정이 기금을 만들어 세대간에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가정자본의 형성)이 공공정책의 목표이어야 한다. 여섯째, 가정 내에서 자본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온다. 일곱째, 복잡한 조세 및 규제 법규를 단순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일곱 가지의 원칙이 마음속에 확고하고 분명하게 자리잡으면, 많은 시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 많은 실행방안을 내놓을 것이다. 우선 세 가지 정책대안을 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금개혁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칠레가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었다. 둘째, 의료저축구좌이다. 이것은 각 시민이 법에 따라 의료저축구좌를 열고 규정된 대로 소득의 일부를 사적인 구좌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단일세flat tax이다. 이것은 정부가 예외없이 소득세율을 단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단일세율을 적용한 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세금을 공제해 주게 되면,

흔히 알려져 있는 것과 같이 단일세가 누진성을 손상한다는 말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앤서니 기든스는 미국과 유럽의 복지국가에 대한 관념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유럽에서는 복지국가가 미국에서와는 달리 완전히 한 세대동안 사회적 이동성과 번영의 도약대로 간주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가정의 위기는 복지제도 때문이 아니라 가정에 영향을 주는 일련의 근본적인 변화와 그것을 둘러싼 제도, 즉 결혼, 성문제, 남-녀의 관계, 그리고 집과 직장의 관계 등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한다.

그리고 토니 블레어의 승리가 사회주의의 실패를 확인해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마가렛 대처의 승리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기 보다는 신자유주의 실패를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 신자유주의는 경제부문을 근대화하려고 하면서 가정을 포함한 다른 영역을 탈근대화시키려는 모순을 가지고 있으며 대처는 자치단체로의 권한양도와 역행하는 정책을 폈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리고 세계화라는 양상은 그것에 대한 낙관론인가 아니면 동요인가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경제, 정치,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전환의 복잡한 묶음이다. 세계화는 국가의 통제력을 상당부분 약화시키며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지역들 및 새로운 연합관계들을 창출해 낸다.

이러한 세계화의 복잡한 양상으로 인해 사회민주주의는 과거의 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재고의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복지국가의 개혁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첫째, 국가의 권한을 시민사회에 양도하기 보다는 초국가적 기구에게 “위쪽으로 양도”해야 한다. 둘째, 복지제도는 경제적·개인적 책임성을 강조해야 한다. 하지만 집단적인 책임의 원칙도 존중해야 한다. 셋째, 가족제도에 관한 한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여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 넷째, 연금 개혁은 노년층에 대한 지원의 차7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 있어서 변화하고 있는 노년층의 사회적 지위를 다루는 접근법을 필요로 한다. 다섯째, 복지제도가 보호하려는 위험이라는 것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존 로이드는 노박이 복지제도와 사회민주주의의 실패를 보여주기 위해서 유럽의 상황을 의도적으로 왜곡되게 짜맞추려 했기 때문에 유럽의 성공사례는 무시되어 버렸다고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오늘날 사회민주주의는 좌파적 정당성에 연연하기 보다는 정책의 실제

결과를 중시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걷고 있다. 노박이 제시한 연금개혁, 의료저축 구좌, 단순한 비례세 등의 정책은 사회주의 정당이 검토하고 있는 수많은 아이디어 중 하나이다. 다만 그런 아이디어를 추진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복지체제를 재구성하는 일이 많은 유권자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복지체제가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민주주의의 새로운 접근방법은 공동체의 새로운 행동양식을 모색한다. 즉 일상적인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지면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는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도록 사람들간에 서로 격려하게 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강화하는 것이다. 즉 좌파가 우파의 영역으로 옮겨간 것은 사실이지만, 좌파 영역의 전통적인 목표, 즉 기회균등,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모두에게 대중에 대한 책임성을 엄격히 묻는 일, 두터운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다양한 시민사회 등을 추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사회민주주의가 이념적 경직성을 탈피했다는 의미이다.

폴 오머로드는 복지체제로 인해서 유럽의 경제가 침체되었다는 주장에 반대하면서 복지제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미국보다는 더 강한 유럽에서 전후 경제성장이 더 높았고, 미국과 유럽사이의 경제적 차이도 줄어들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유럽에서 사회민주주의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었던 시기에 오히려 미국보다 성장률이 더 높았다는 것은 복지체제로 인해 경제적 침체가 발생한다는 주장을 역전시킨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사회민주주의라는 것은 현재도 그러하고, 항상 실질적으로 보다 큰 분류인 자본주의의 한 유형이다. 즉 사회민주주의의 핵심에는 자본주의 경제작동을 위해서 요구되는 근본조건-사유재산권, 법의 지배 등-을 지키려는 강한 약속이 있다.

20세기 대부분의 기간동안 국가와 국가의 활동은 진보의 수단이었다. 그러나 국가만이 계속해서 사회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사회정의를 달성하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판명된 것은 사회민주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다. 사회정의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민주주의적 프로그램의 효과는 경제성장을 통해 달성된 사회정의를 비한다면 2차적인 중요성밖에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순수한 자유시장경제가 대안인 것은 아니다. 아담 스미스의 지적처럼 경제와 사회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도덕적 환경이 필요하고 국가의 역할은 바로 이런 틀을 지지하기 위해 권력을 잡는 일이다. 따라서 지난 세기의 전환점에서 유효했었던 진보의 모델에 매달려 있는 일이 순진한 것처럼, 전례 없는 부와 번영

의 시대에 서구국가가 복지국가를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우스운 일이다.

마지막으로 노박은 논평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공동의 장이 있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복지제도의 개혁을 위해 의존성과 책임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 그는 평자들의 논평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의 위기

마이클 노박

“결국에 가선 국민이란 정부를 목자로 가진 겁 많고 열심히 일하는 동물의 무리에 불과하다.”

알렉시스 드 토크빌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에게 있어서 당대의 결정적인 경제적 사건은 1989년말 베를린 장벽의 붕괴였다. 당시 동독에 비춰진 바깥 세계의 조명에 의해, 서독의 자본주의와는 강한 대조를 이루는 사회주의 경제의 40년간의 실험의 결과가 드러났다. 독일의 양측은 동일한 문화와 역사를 공유했다. 양측 모두 제2차 세계 대전으로 폐허가 되었다. 양측 모두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그것은 사회과학자가 관찰할 수 있는 최고로 높은 정도의 통제된 실험이다”라고 그린스펀은 말한다. 그 결과는 사회주의 경제이론이 서구의 정치경제학 이론보다 우수하다는 가설을 여지없이 짓밟아 놓았다.

장벽이 무너지고 10년이 지난 지금 대규모의 보조를 받으면서도 동독은 아직도 서독에 비해 아주 못사는 이웃으로 남아 있다. 사회주의 실험에 의해 가장 크게 손실을 입은 것은 작업윤리, 기업가정신, 위험부담, 신뢰, 창조적 태도 등을 포함하는 인적 자본의 손실이다.

게다가 사회주의의 강력한 지주였던 구 소련에서 ‘현존하는 사회주의’가 붕괴함으로써, 세계 곳곳의 국제사회주의의 구조에 파문이 일어났다. 왜냐하면 이러한 붕괴는 경제이론으로써 사회주의가 심각한 오류를 갖고 있으며 자본주의경제에 대한 사회주의적 분석도 역시 부정확하다는 점을 모든 사람에게 입증해 주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라는 경제원리가 이같이 붕괴함으로써 공산주의는 물론이고 사회민주주의와 같이 사회주의 경제이론에 부분적으로나마 바탕을 두고 있던 모든 교리나 이상들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정당들은 서둘러 자신들의 공식적인 명칭을 바꾸었는데, 보통 듣기 좋게 ‘사회민주주의’ 등의 이름을 택했다. 하지만 좋은 의미로 사회민주주의를 주창하는 국가에서조차 출생률은 떨어지고 있으며 노년층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다. 또한 의료기술의 진보로 의료비용은 점점 비싸지고 있으며, 경제활동인구 대비 연금수혜자의 비율은 이미 3 대 1 수준에 도달했고 연금수혜자에 비해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기업과 직업창출, 이윤, 재투자, 개인적 유인을 선호하는 경제정책을 택하고 있다.

새로운 영역

이런 점에서 1997년에 영국에서 토니 블레어가 당선된 것은, 그리고 그를 승리하도록 이끈 신노동당New Labour이라는 개념은 사회민주주의가 올바르다는 것을 입증해 주기는 커녕 사회민주주의가 변형되었음을 확인해 주었고 이러한 과정은 영국에 대해, 또 유럽의 모든 국가에 대해 중요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 유럽과 다른 지역의 많은 논평가들은 토니 블레어의 승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마가렛 대처의 승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블레어의 신노동당은 (구)노동당으로서는 15년 전, 10년 전, 아니 5년 전까지만 해도 생각할 수조차 없었던 정치적 목표(그리고 사회적 이상)를 채택하였다. 1979년에 당선된 이후 마가렛 대처는 세계가 근본적으로 그리고 현저하게 변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비록 얼마간의 차질을 빚기도 했지만, 영국을 향후 20년 동안 지속된 성장과 기회의 궤도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철의 여인'은 신노동당이 무의미하고 처벌적인 재분배주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한편 국민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보모국가Nanny State로부터도 짓을 떼도록 하였다.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토니 블레어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전부는 아니라고 해도 유럽의 많은 좌파 세력이 이 교훈을 배운 것 같다. 여기에는 최근에 선거에서 이긴 프랑스의 사회당도 포함된다. 유럽 좌파의 지도자들은 사회변화에 순응하기 보다는 사회변화를 이끄는 데 익숙하고, 교조주의에 빠져 실패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진로를 수정하는데 익숙해 있다. 자신들이 세워 놓은 목적-평등, 고통에의 동참, 빈곤층에 대한 배려-을 (자신들 생각으로는)배신하지 않는 한 그들은 새로운 수단-새로운 전술, 새로운 전략, 심지어는 새로운 미래에의 비전까지-에 매우 쉽게 적응해 왔다.

유럽에서 가장 통찰력 있는 정치 사상가 중 한 사람인 옥스포드 대학교의 존 그레이가 「더 타임즈」 문예증보판에 쓴 말을 참고해 보자.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체제는 폐쇄경제 시대에 수립되었다. 이 체제는 외환의 통제와 관세를 통하여 자본과 생산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주권국가의 능력에 의존했다. 이 체제는 자본과 생산이 제한없이 전세계적으로 이동하는 환경에서는 생존할 수 없다.”

그레이에게 있어서 토니 블레어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체제가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속하는 정책들에 얼마나 깊이 빠져들어 있는지를 블레어가 수년 전에 파악했기 때문이다. 그레이에 따르면 사회민주주의가 빠진 수렁은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기술 혁신에 의하여 어떤 직종(심지어는 어떤 산업부문)

이 사라지게 되면 직업의 안정성에 바탕을 둔 노동시장은 유지될 수 없다. 둘째, 단일한 고용주가 얻는 이윤과 연결된 연금제도는 일생을 통하여 한가지 직종만을 갖게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시대에는 매우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셋째, 기본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주고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가도록 고안된 복지제도는 세계화 시대에는 극히 부적합하다. 이런 점을 고려해 그레이는 이렇게 결론짓는다. “유럽의 사회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개혁을 할 수 없다면 이 체제는 세계경쟁이라는 강풍에 의해 날아가 버릴 것이다.”

존 그레이가 바르게 지적했다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사회적 협약을 가능하게 했던 전제들은 의문시되지 않을 수 없다. 유럽에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 비판론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세계화’라는 전망이 많은 유럽 지식인들을 뒤흔들고 있다는 점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들의 가장 큰 걱정은 높은 실업률이 아니다. 모든 부문에 누적되고 있는 산더미와 같은 채무도 아니다. 그것은 전후 체제의 안정을 가능하게 했던 기반에 대한 점증하는 의혹이다.

몇 세대 동안 자본주의를, 특히 미국 자본주의를 깔보던 많은 유럽의 지식인들이 처음으로 ‘사회적’이라는—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사회정의, 사회적 협약—말의 전통적인 의미를 의심스럽게 보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세계화라는 사회화의 한 ‘형태’를 갑자기 좋아하지 않게 된 것 같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에서는 세계화에 대한 낙관론이 자주 들리고 있다(물론 미국에도 고립적이었던 미국의 과거에 집착하는 경제민족주의자들이 파탄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활황을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을 통해서 현재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알 수 있지만,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면 현재의 상황을 훨씬 잘 알 수 있다. 1997년 5월 다우존스 산업지수의 평균치가 사상 최고인 6천5백에 도달하고 신문들이 곧 이어 질 심각한 ‘조정국면’을 예언하고 있었을 때, 두명의 경제전문 언론인이 10여명의 다른 언론인들 앞에서 2천년 말까지 주식시장은 1만1천에 도달할 것이라고 내기를 걸었다. 당시 만찬에 참가한 어느 누구도 그 내기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지 않았다. 그 근거는 세계화였다.

몇 달 후 아시아의 위기가 명백해졌고 주식시장에 곧바로 조정이 이루어 질 것이란 예측이 붓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대다수 미국인들은 계속해서 유례없는 기회에 대해서 말하고 희망을 부풀렸다. 이러한 낙관론은 곧잘 틀린 것으로 판명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다. 즉 미국과 유럽이 세계화에 대해 느끼는 심리상태는 확실히 다르다는 점이다(영국은 광범위한 영연방이라는 연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낙관론을 어느 정도 공유할 지 모르지만 아직은 유럽의 비판론에 더 가까운 것 같다).

일찍이 1835년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유럽인과 비교해 볼 때 미국인은 위험, 기회, 모험, 꿈을 즐긴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오늘날에도 미국인들은 '고도의 문자해독력과 숫자해독력을 지닌 동아시아 사회'의 자본주의 모델의 놀라운 성공(최근의 '아시아 위기'에도 불구하고)을 즐기고 있으며 아시아 위기의 배후에 있는 교훈을 배우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다. 미국인들은 또한 '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경제개혁에 따른 세계시장의 거대한 확대'를 즐기며 남미의 선두 부문(예컨대 칠레)이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발전을 즐기고 있다. 일부 미국인들은 (소련의 오지輿地 및 중국을 포함하는) 지구 전체의 방대한 천연자원이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인류의 공공선公共善을 위하여 사용될 것이라고 결론 짓는다.

이같은 낙관론을 유럽인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1979년에 카터 대통령과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오직 병폐, 스태그플레이션, 쇠퇴뿐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 그러나 레이건 대통령이 1981년에 근본적인 경제개혁을 시작한 이후 미국 경제는 3분의 1 이상-동서독의 경제를 합친 규모를 새롭게 덧붙인 만큼- 성장하였으며 새로운 기술을 산출해 내었고 이전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였다. 1981년에 컴퓨터 산업은 보잘 것 없었는데 이제는 미국에서 가장 큰 산업이 되었다. 미국의 고용인구는 그 사이 3천만 명 이상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지난 3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 전망에 대한 이런 낙관론은 당파를 초월한 것으로 클린턴과 고어도 그들 나름대로 낙관론을 펴고 있다.

문화적 위기

우리의 경제적 활력을 고려한다면 우리 미국인들은 다른 종류의 위기, 즉 문화적 위기에 정신을 빼앗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형성되었던 사회적 계약이 긴박한 개혁의 필요에 직면하고 있다면,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미국에서는 문화의 긴박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단지 영화, 텔레비전, 대중음악 부문만이 아니라 공적인, 그리고 사적인 도덕생활에서의 문화적인 개혁을 필요로 한다. 실제로 많은 미국인들은 자유로운 사회가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도덕적 생태학Moral Ecology-이런 용어를 써도 된다면-에 의존한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자유로운 사회란 원래 도덕적인 성취의 결과이다. 자유로운 제도는, 더욱이 그런 제도의 활력은 아무런 도덕적 기초 위에서나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이 언젠가 물었던 것처럼 개인적인 생활에서 자치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공생활에서 자치를 이룰 수 있을까?

비록 서로 다른 유형의 증거를 근거로 하고 있기는 해도 대서양 양편에서 우리의 공동문명이 모두 다 치명적인 위협에 처해 있다. 현대국가의 구조적 기반은 시간이 지

남에 따라 두 가지의 심각한 시험에 직면하고 있고, 만약 그 중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국가는 암벽에 부딪히듯 험사리 깨어질지도 모른다. 첫번째 테스트는 외적인 현실-경제학적인 것으로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태, 기술발전, 세계화 등-의 테스트이다. 두번째 테스트는 내적인 현실-시민의 도덕성과 사기士氣-의 테스트이다. 유럽에서는 전자를 두려워하고 미국에서는 후자를 두려워한다.

두 번째, 즉 내적인 시험은 일반적으로 덜 논의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해 두는 것이 유용할 듯하다. 20여 년 전 어떤 월요일, 이란의 왕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주 금요일에 갑작스런 이슬람교도들의 반란이 일어나서 군인들이 무기를 놓아버렸고 왕은 왕위에서 쫓겨났다. 그 후 10년이 지난 1989년 6월의 북경 사태, 11월의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루마니아와 그 밖의 지역에서 일어난 사태는 다시 한 번 정신적 요소의 위대한 힘을 입증해 주었다. 18년 전에 솔제니친은 진실 한 마디가 몇 개의 사단병력보다 더 강력하다고 쓴 적이 있는데 이러한 지적은 거역할 수 없는 힘으로 우리의 눈 앞에서 실현되었다.

문화적 위기의 다른 측면은 우화같은 다음의 얘기 속에 잘 드러나고 있다. 1960년대 말 캘리포니아의 한 공개 세미나에서 군나르 미르달Gunnar Myrdal은 (그가 애지중지하는)사회민주주의가 스웨덴 사람들의 덕성을 약화시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였다. 몇 년이 지난 후 그는 유감스럽게도 스웨덴 사람들의 도덕성이 아마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되었다는 비감에 찬 공식선언을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지 않는데 병가를 내고 허리의 통증 등을 이유로 장애인임을 선언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미국에서도 '정부가 모든 돈을 그 곳으로 몰고 간다'는 새로운 합리화가 생겨났다. '따라서 내가 내 뭇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순진한 일이다.' 지난 30년 동안 정부의 보조금에 대한 의존은 커졌다. 물론 이것이 우리 시대 도덕적 부패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그것은 여러 가지 좋은 일의 원천이기도 하다). 부패의 문화적 원인은 많기 때문이다.

오늘날 미국 사람들의 도덕이 타락했다는 사실은 수많은 통계수치에 의해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폭력 범죄는 1965년 이후 600퍼센트 증가했고 사생아 수도 600퍼센트 증가했다는 것 등이다. 로버트 보크는 『고모라¹⁾를 향한 어수선한 행진』이라는 저작에서 이런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보건성 장관은 1990년에 미국의 조기 사망 중 40에서 70퍼센트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실 때문이라고 추산했다. 즉 피할 수 있는 자기상해적 행위(과음, 마약, 문란한 성생활, 흡연, 운동결핍, 영양불균형, 폭력적 행동 등) 때문인 것이다.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 가능한)도덕적 분석과는 별도로 이런 유례 없는 추세에 대처할 정책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막대한 규모에 이른다. 범죄예방, 보건, 복지의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로 인해 미래의

1) 구약성경에 나오는 타락한 도시(역자 註)

세대에 부담을 주는 재정적자가 유발되었다. 물론 현재의 납세자들도 다른 사람이 저지르는 자기파멸적인 행태에 대해서 보조금을 내고 있다.

유럽과 미국의 정책 전문가들은 복지국가의 재정적 위기에 관해—즉 재정적으로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 부채가 누적되어 폭발하기 직전이며 멀지 않은 미래세대가 이를 감당해야 한다는 점 등— 폭넓은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보다 심각한 것은 바로 복지국가의 정신적 위기이다.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인적 자본, 즉 활동적이고 지적이며 창조적인 시민이다. 우리가 우리의 인적 자본을 파괴하고 있다면 우리의 문명은 치명적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미 오래 전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평등이념이 자유보다 우위에 설 시기에 관해 조기경보를 발한 바 있다. 그는 1835년에 “나는 어떤 새로운 상황에서 전제주의 despotism가 세상에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고 썼다. 그는 평등의 이름 아래 견딜만하다고 받아들여진, ‘질서 있고, 신사적이며, 평화로운 노예제’의 한 형태를 생각했다. 백성들에 대한 동정심에 따라 움직이는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제공하고, 일상용품을 미리 알아서 마련해 제공하고, 그들이 즐길 것들을 만들어 주고, 기본 관심사를 보살펴 주며, 그들의 산업을 지도하고, 유언 testament을 위한 규칙을 만들어 주고, 그들의 유산을 나누어준다. 정부는 상세한 동시에 한결같은 소소하고 복잡한 규칙의 망綱으로 사회생활 전체를 포괄한다. 이 망綱 때문에 최고로 위대한 독창성을 지닌 인간, 가장 활기찬 기질을 가진 인간조차 균중의 위로 머리를 들어 두각을 나타낼 수가 없다. 정부는 인간의 의지를 부수지는 않지만, 그것을 누그러뜨리고, 구부리고, 방향 지운다. 정부가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종종 어떤 행동을 금지한다. 어떤 것도 파괴하지 않지만 생성될 수 있는 많은 것을 막는다. 결코 폭군은 아니지만 방해하고, 억제하고, 무력화시키고, 숨을 막고, 무효로 만드는 일이 너무 많아서, 결국에 가서는 국민이란 정부를 목자로 가진 겁 많고 열심히 일하는 동물의 무리에 불과하다.”

이것이 미국인을 괴롭히는 악몽이다.

복지국가에 대한 비난

미국사람들에게—특히 1930년대 대공황의 와중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복지국가가 많은 혜택을 주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많은 면에서 불가피한 것이었다. 농촌 지역에 대한 전기시설 지원과 새로운 대학 캠퍼스의 건설(1948년부터 1978년 사이에 평균 2개 주주당 1개 건설), 농민에 대한 신용 대출과 담보 대출, 식품지급과 고용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저소득자 보조(사회보장기금)와 노인을 위한 의

료혜택 등등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방정부와 주州정부는 거의 모든 시민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었다.

따라서 오늘날의 논쟁점은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의 여부가 아니라, 새로운 조건에 대응하고 프랭클린 D. 루즈벨트의 ‘뉴딜’ 이후 지난 60년 동안의 경험에서 드러난 결함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수정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이다. 덧붙여 말하면 뉴딜의 바탕을 이루는 철학과 1964년 린든 B. 존슨이 시작한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의 바탕을 이루는 철학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 종종 지적된다. 거칠게 표현한다면 뉴딜 정책은 전통적인 미국적 가치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한편 위대한 사회는 새로운 윤리관을 도입했다고 지적된다. 예컨대 전자 하에서는 어린이가 딸린 가정에 대한 보조AFDC로부터 수혜를 받았던 사람의 약 98퍼센트가 미망인이었다. 후자 하에서는 거의 모든 혜택이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어떤 요구도 하지 않은 상태로) 이혼했거나 별거중이거나 미혼인 여성에게 주어진다.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의 정신은 무비판적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수혜자로부터 수혜에 상응하는 행동을 요구하지 않은 채 혜택을 주는 것이다. 마치 그것이 한 마디로 말해 ‘주어진 권리’인 것처럼 말이다.

바로 이런 실행과정 때문에 다음과 같은 비난이 점점 더 가해지고 있다. 첫째, 복지 국가의 혜택은 너무 받기 쉽고 거절하기 어려울 만큼 매력적이다. 우리는 (수 없이 많은 합리화과정을 통해)국가가 우리에게 혜택을 베풀어 마땅할 만큼 빛을 지고 있고 우리는 모두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 혜택이 필요하든 않든 간에 그렇게 풍부하게 제공되는 것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복지국가는 우리를 타락시킬 뿐만 아니라 점증하는 지출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된다.

둘째, ‘개인주의’에 대한 과장된 반발로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은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공동체’를 지나치게 강조할 뿐만 아니라 너무 무비판적으로 ‘공동체’를 ‘공공부문(국가)’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공동체의 최전선에 서 있는 대리인으로 행동하는 이들은 행정국가의 공식 프로그램을 기존의 자발적인 프로그램보다 선호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관료적 방법 속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예컨대 이 방법은 인간의 주체성을 부정한다)에 대해 스스로 경계를 하면서도 공식 프로그램을 선호한다. 그들은 국가사업이 국민들로 하여금 보호적인 국가공동체에 대한 보다 큰 ‘소속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한다.

두 가지 결론이 가능하다. 첫째, 개인의 책임이라는 주체성이 서서히 메말라 가면서 궁극적으로는 복지국가의 ‘나태함’이 나타난다. 예컨대 1965년에 열렸던 제2차 바티칸 공회는 복지국가를 찬양하면서도 이 나태함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 있다. 다음으

로 행정국가는 시민사회에 의해 수행되어 오던 대다수의 기능들을 꾸준히 잠식해 들어간다. 국가와 시민사회를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던 제도는 미약해 진다. 이리하여 상위기관이 하위기관을 누르게 되면서 시민사회의 보조기구로서의 국가라는 원칙은 지속적으로 침해된다.

미국에서 가장 존중받는 사회 평론가 중의 하나인 어빙 크리스톨 Irving Kristol은 공화정이던 로마의 남성다움이 로마제국의 퇴폐로 전락하는 장면을 논한 해겔을 인용한다. “국가를 자신들의 활동의 산물로 바라보는 관점이 시민들의 정신으로부터 사라져 버렸다.” 오늘날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면서 크리스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오늘날 복지국가의 임무는 시민으로 하여금 자신이 국가활동의 산물이며, 국가에게 쫓라대는 객체이며, 더 이상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시민이 아니라는 점을 확신시키는 일이다. 완전히 발전된 복지국가는 참호와 장애물로 방어되고, 그 주변에 몰려드는 충성스런 사람들에게 안전과 보호처를 제공해 주는 현대판 봉건영주의 성이다.

복지국가의 국민들은 선조들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성취하여 물려 준 자유를 안전이라는 약속 - 더 이상 지켜질 수 없는 약속 - 과 바꾸어 버렸다.

복지국가는 일부 수혜자들의 도덕성을 무디게 한다고 어떤 사람은 비판한다. 다른 사람들은 복지국가가 사람들의 창의성과 힘든 작업에 벌칙금을 물려서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또 다른 사람은 복지국가가 고용주로 하여금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지 못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통계에 의해 방금 한 주장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 다시 한 번 작은 이야기를 통해 접근해 보겠다. 1997년에 이탈리아의 어느 교수가 이발사와 대화를 하다가 왜 그렇게 바쁜데도 도와 줄 사람을 구하지 않는가 하고 물었다. 이발사는 머리 깎기를 멈추고 흥분하였다. “나도 누군가를 고용하고 싶소!”라고 이발사가 강조했다. “그러나 연필을 들고 계산을 해 보았소. 임금을 지불하고, 여러 가지 사회보장비를 지불하고, 온갖 세금을 내고 나면, 나는 손해가 납니다. 그것도 골머리를 썩인 일, 속상한 일, 내가 쓴 시간은 계산에 넣지 않았는데 말이요. 나도 누군가 고용하고 싶소. 나도 늙어가고 있소. 그러나 그럴 수가 없소. 정말 어리석은 짓들이오!”

복지국가의 새로운 비판자 중에는 놀랄만한 인물이 있다. 바로 교황이다. (이것이 놀랄 만한 까닭은 유럽에서 기독교 사회사상은 자유방임보다는 사회주의 사상에 더 가깝다고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교황의 말이 영국에서는 별 효과가 없겠지만 여러 유럽국가의 기독교인들은 사회민주주의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교황의 비판은 다가올 위기에 대해 재미있는 시각을 제공한다.

사회적 보조 국가는 사회에 직접 개입하고 사회의 책임감을 박탈함으로써 (1) 인간으로 하여금 정열을 상실케 하고 (2) 공공기관을 무절제하게 증가시키는데 (3) 공공기관은 고객을 위한 봉사에 관심기울이기 보다는 관료적인 사고방식에 의해 지배되며 (4) 엄청난 지출을 수반하게 된다.

달리 말하면 인간의 자선행위를 대체함으로써 사회적 보조 국가는 인간다운 삶에 대한 적절한 척도를 제공하는 '작은 정성의 모임'을 대신해 버리며, 몰인격적이고 비효율적이며 반생산적이고 인간 정신을 질식시키는 '대중사회'를 만든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시민사회의 활력을 대신함으로써 사회적 보조 국가는 개인이 책임있게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을 감소시킨다.

의심할 나위없이 현대 복지국가는 많은 좋은 일, 특히 노인층을 위해 좋은 일을 했지만 많은 나라에서 보다 젊은 세대에 대한, 특히 결혼과 가족생활에 대한 복지국가의 영향은 대단히 파괴적이었다. 사생아로 태어난 아이들의 비율은 미국, 영국, 스웨덴을 포함하는 많은 국가에서 전례 없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복지국가에 반대하는 가장 압도적인 증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 의도와는 반대로 사회민주주의는 가족이 그 사회의 강력한 기반이 되었던 문화에서조차 가족에 해를 끼치고 있는 듯하다. 어빙 크리스틀은 덧붙인다. "50년 전 복지국가의 주창자들 중 어느 누구도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사회제도인 가족을 파괴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오히려 독버섯처럼 퍼지는 사회적 병폐들—범죄, 사생아, 마약, 이혼, 성적 문란 등—을 복지국가가 제거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적어도 억제할 수는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가족과 복지

바로 이런 비난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앞에서 언급한 가족과 복지에 관한 세미나는 좌파와 우파를 대변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였고, 일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회의를 했던 것이다.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후, 1965년에서 1985년 사이의 20년 동안 복지 프로그램에 의해 성취된 것이 무엇인가, 즉 무엇이 옳았고 무엇이 틀렸는가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또한 개혁을 위한, 긴 목록으로 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았다. 우리는 양대 정당의 사고를 새로운 방향으로 돌릴 수 있기를 희망했다. 1965년 이후 노년층(65세 이상)의 생활이 엄청나게 향상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1985년 현재 65세 이상 노년층의 거의 대다수는 자기 소유의 집에서 살며(이는 건강과 자립심의 표시이다) 대부분의 집들이 저당 잡히지 않은 상태이다. 빈곤층으로 사는 비율은 한 자리수로 떨어졌는데, 아직도 빈곤한 층은 대체로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존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년층이 더 오래 살게 된 것도 확실하다. 1985년 현재 노년층의 수는 그 이전 세대보다 수백만 명이 더 많다. 실제로 우리가 '고령층'이라고 부르는 85세 이상의 연령층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8세와 65세 사이의 젊은층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 이들의 상황은 1965년보다 1985년에 더욱 나빠졌다. 폭력성 범주는 600퍼센트 증가하였고 가족의 구조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 많은 사람의 사기士氣는 훨씬 더 떨어졌다. 게다가 이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같이 '빈곤'의 탓이 아니라 가족의 해체와 관련되어 있음이 우리의 세미나에서 발견되었다. 이것은 우연한 발견이었다. 여러 가지 통계표를 상호 연관시키던 중 우리는 다음의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1) 두 사람이 결혼 상태를 유지하는 가정 중 6.7퍼센트만이 빈곤하였다. 달리 말하면 단순히 결혼한 상태를 유지하는 한 미국인이 빈곤하지 않을 확률은 93퍼센트이다. 이 확률은 다음의 두 가지에 의해 더욱 높아진다. (2) 고등학교 졸업(이것은 정부가 교육비를 보조하는 의무교육이다)과 (3) 최저 임금을 포함한 어떤 직업이든 정규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 빈곤층에 속하지 않을 확률은 더욱 커진다.

결혼, 교육, 취업 등 기본적인 요인들이 빈곤을 감소시키는데 발휘하는 놀라운 효과는 미국에서 편모 가정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편모와 그의 가정은 미국 빈곤층을 이루는 최대 집단이며 가장 급속히 증가하는 집단이다. 게다가 이런 가정의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중도 탈락할 위험, 취업을 못하거나 불가능하게 될 위험, 보다 많은 건강상의 문제를 겪을 위험, 사법 당국에 의해 체포될 위험은 다른 집단의 경우보다 크다. 물론 이혼하거나 별거 중이더라도 다소 성숙한 어머니의 자식들은 이 보다는 훨씬 나은 처지에 있다. 이렇게 나이가 어느 정도 든 홀어머니는 취업하는 비율이 훨씬 높으며 복지혜택을 입더라도 2년 안에 벗어나고 자식들을 보다 잘 키우는 경향이 있다. 통계상의 수치로 보면 나이 어린 여성, 특히 정식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어머니 집단의 경우 상황은 훨씬 나쁘다.

우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8세와 30세 사이의 사람 중 약 400만 명의 집단에게는 '빈곤'이 아닌 '의존성'이 가장 심각한 문제임이 밝혀졌다. 우리는 '의존적'이란 말을 다음과 같이 매우 엄밀하게 정의했다. 의존적인 자는 첫째, 젊고 건강한 성인 중에서 공공기금의 혜택에 의존하는 자로서, 둘째, 어리거나 나이가 많아 자신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가정 내의 다른 구성원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자를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그들의 자식들이 의지할 수 있을 만큼 독자적으로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가는 시민으로서 생활하지 못하는 자이다.

이에 덧붙여 조사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이 의존성의 굴레에 사로잡혀 버릴 경향은 두

드러지게 높다. 즉 그들이 복지프로그램의 혜택을 1~2년 받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들은 종종 공공기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들의 자식들도 공공기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유형은 상향이동이라는 미국적인 기대감에 모순된다. 상당수의 사람들—약 400만 명과 그들의 자식들—은 가난에서 벗어날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그들은 가난에 얽매어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사회질서에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 미국 해안에 도착할 때 미국의 빈곤층보다 더욱 가난한 수백만의 이민자들은 종종 영어를 알지 못하면서도 기회를 포착하여 4~5년 이내에 가난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의존의 굴레에 갇힌 건강한 젊은 미국인들은 상당한 정도로 공공기금을 더 받아쓰면서도 의존성에서 벗어날 전망은 낮다. 그들은 힐레어 벨록Hilaire Belloc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가 말했던, 아주 상이한 관점에서이지만, 일종의 “예속”이라고 묘사했던 상태에 빠져 있다.

복지제도에 의존하는 사람은 상당수가 전국적으로 100대 도시의 빈곤 지역에 몰려 있다. 그들은 그들의 상황을 향상시키려고 한 빈곤과의 전쟁 같은 노력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듯하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볼 때 그들의 등장은 빈곤과의 전쟁과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듯하다. 이점에 관하여 분명히 말하자면 빈곤과의 전쟁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새로운 의존성을 유발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빈곤과의 전쟁이 빈곤층의 수를 줄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많이 있다. 그들의 처지는 점점 악화되는 것 같다. 그들은 “기반을 잃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우리 연구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우리가 합의를 이룰 수 있었던 70여개에 이르는 적극적인 권장사항일 것이다. 이들 중 많은 사항이 50개 주에서 사회적 실험의 대상이며, 일부는 연방정부의 실험대상이다. 실제로 1996년에 통과된 전국적인 복지개혁법이 1997년 가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된 후 각 주는 자발적으로 사회복지의 역할을 크게 줄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30~40%를 줄이기도 했다. 이것은 보다 많은 실험과 새로운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 기금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초기에 나타난 지표는 고무적이기는 하지만, 가장 좋은 의도로 만든 개혁도 기대하지 않은 효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리고자 한다.

국가로부터 시민사회로

20세기를 주도한 주제는 국가가 인간 욕구와 행위의 구현체이며, 국가를 유익하고 동정심 많으며 고귀한 존재로 본 헤겔에 의해 제시되었다.

그렇지만 국가가 공공선公共善을 위한 유일한 도구도 최선의 도구도 아닌 것은 명백하다. 전체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복지국가도 금세기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국가에 부

여했던 꿈을 이루지는 못했다. 서구에서 복지국가가 기여한 바를 공정히 평가하자면, 그것은 1930년대와 제2차 세계 대전의 폐허로 인해 곤경에 빠진 사람들의 고통을 경감해 주는데 큰 기여를 했고, 전례 없는 번영을 누리게 하고, 상당한 정도로 생활의 질적 향상과 노인층의 장수생활을 보장해 주고, 그리고 자유와 권리의 폭을 넓혀 주었다. 그렇지만 그것에 따르는 도덕적, 재정적 비용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그것의 목표와 방법은 과감한 재협상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

토니 블레어가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그가 어떤 탈출구를 고안해 낼지, 어떤 목표를 새롭고 더 나은 개념으로 제안할 지 아직 분명치 않다. 다른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우리 시대와 같은 전환기에는 기본 원칙을 생각해 보는 작업이 커다란 실천적 의미를 지닌다.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은 일종의 혁명(re+volvere, 즉 다시 돌아가기)이며, 현재로서는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인다. 이것은 간단해 보이는 많은 원칙들을 재음미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자면 첫번째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가치있는 자유사회는 무엇인가? 자유사회란 무엇보다도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현명한 시민들이 자유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공공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정부를 형성하고자 하는, 자치정부를 위한 구상이라는 사실에 동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자치정부를 실험해 보려는 중요한 이유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자신들의 단체와 공동체에서, 국가와 상관없이 스스로 할 수 있을 만큼 시민들이 자유로와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부를 엄격하게 제한해야만 한다. “보수주의자들은”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이를 폭넓게 해석하기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가운데 양 견해는 공공선에 기여할 것이다.

정부에 관해 더 이상 이야기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자유로운 시민의 성격에 대한 공통적인 견해를 형성하기 원한다면 적어도 몇 마디 더 해둘 필요는 있다. 시민(市民)은 신민(臣民)(즉 우리 조부모와 같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신민)과는 아주 다르다. 시민은 주권자, 즉 궁극적인 권력을 지닌 자와 동류에 속한다. 자유로운 사회에 있어서 주된 권력의 보고(寶庫)는 시민의 개인적인 책임이다. 상황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새 단체나 운동을 조직하는 일은 시민에게 달려 있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정의라는 미덕은 도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형성하는 습

관이다. 그렇다면 사회정의의 미덕은 두 가지 점에서 ‘사회적’이라 할 수 있다. 첫째, 그 목표는 어떤 측면에서 도시-국가 전체 또는 그 일부지역-의 개선이다. 둘째, 그것의 실행은 연합, 협동, 다른 사람을 고무시키고 조직하는 것과 같이 명백한 사회적 기술을 포괄한다.

토크빌이 지적하였듯이 단체를 형성하는 습관이 민주주의의 첫번째 법칙이다. 자유로운 단체없이 진정한 민주주의란 없다. 단체의 형성은 사회정의의 첫번째 과제이다. 자치정부는 자유로운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 단체를 통해 운영된다. 이런 습관을 실천하는 일이 시민의 주요한 정치적 책임의 하나이다. 일부 운동가들이 생각하듯 사회정의를 국가에만 관련짓거나 모든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것을 국가와 관련짓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사회정의란 시민사회 속에 있는 자유로운 단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미덕이다. 물론 일부 시민들은 자신들의 단체를 이용해 정부 시책이나 개혁을 위해 로비활동을 벌일 것이다. 사회정의의 원칙은 이념적으로 중립적이며 좌파, 우파에 의해 모두 실천되고 있다.

시민은 엄격한 경제적 책임도 갖고 있다. 인적 자본이 자본의 기본적 형태이므로 인간은 모든 국가의 가장 소중한 경제적인 자원이다. 자유사회의 경제에 있어서 활동적인 인간은 중요한 활력소이다. 활동적인 인간의 상상력, 창의성, 주도성으로부터 경제적 협력체가 형성되고 회사가 만들어진다. 활동적인 사람들의 발명욕과 창업으로부터 새로운 재화와 용역 그리고 이를 제공할 방도가 생겨난다.

따라서 자유로운 사회의 정치경제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시민의 개인적 책임과 (정치적인, 경제적인)협력체를 형성하는 기술에 달려있다. 이것이 바로 자치정부를 실험해 볼 때의 핵심사항이다.

개인적 책임을 방해하고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공공정책은 시민들을 억압하는 것이다. 이런 정책은 또한 자치정부의 실험에도 파괴적이다. 비록 의도한 바는 아니라 하더라도 복지국가가 이런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더욱이 사회민주주의자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은 성장과 기회를 만들어 내기 보다 곤궁한 자를 돕는데 보다 많은 에너지를 집중시켜 오지 않았는가? 평등을 자유보다 소중히 여기지 않았는가? 실적을 보상하는 인센티브보다 분배에 우선 순위를 두지 않았던가?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사회민주주의 이상이 개인적인 주도성과 개인적 책임을 보다 많이 고려하도록 조정되고 있다.

이리하여 사회민주주의자는 이제 앞으로 한 발짝 크게 내딛고 나아가, 자치정부라는 목표를 자신들의 목표로 만들 기회를 갖게 되었다. 만일 토니 블레어가 이것을 의도하고 있다면 그의 활동은 연구할 가치가 있다. 그가 이것을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또는 성취하든 못하든- 이것은 유럽에서 자유사회의 미래를 위하여 누군가가 이끌고 나가야 할 정치적 목표이다.

이 목표의 기본 골격은 간단히 서술될 수 있다. 자유로운 세계가 긴급하게 원하는 것은 집권화된 관료체제가 맡고 있는 임무를 시민 각자에게 그리고 그들의 다양한 단체들에게 양도하는 일이다. 양도devolution! 국가로부터 시민사회로의 양도가 핵심이다. 중앙정부로부터 지역과 현지로의 양도, 현실성 있는 것을 비합리적인 관료적 법령으로부터 구분짓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가진 주체에게 중요한 책임을 양도하는 것이다. 이것의 기본 주제는 국가로부터 시민사회로의 양도이다. 즉 관료로부터 모든 영역의 개인과 그들의 사회 단체들-가정과 종교단체, 경제단체, 정치단체, 예술단체, 과학단체, 다양한 형태와 목적을 지닌 여러 사회단체-에게 권한을 양도하는 일이다.(나는 지역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보다 광범위한 국제조직을 재조직하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이들 조직이 밑으로부터의 에너지에 무감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뿐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국가가 단순히 “사라져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또 두말할 것도 없이 복지국가의 일부 요소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한 대륙을 포괄할 정도로 거대하고 대단히 이동성이 크며 유연한 경제에는 특히 그러하다. 그렇다고는 해도 인간의 사회적 본성을 충족시키는 주요한, 혹은 유일한 길이 국가와 집단주의적 방법에 있다는 생각은 항상 틀린 생각이다. 국가는 인간의 진정한 사회적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단지 하나의 부분에 불과하며 결코 그 핵심이거나 전체는 아니다. 게다가 국가가 시민사회에 대해서 우위를 점하도록 허용하는 일은 잘못이다. 국가는 주인이 아니라 노예이다. 복지국가는 제대로 된 시각의 조명을 받아야 하며 엄격한 제약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양도가 어떤 공공정책을 통하여 다음 세대에 걸쳐 실시되어야 할까? 앞서 말한 고려사항에 관해 -아마도 일부는 인정하기가 고통스러울 만큼 분명한 사항이었는데-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대체로 동의를 할 것이다. 그들이 몇 발자국 더 내딛을 수 있을까? 먼저 몇 가지 일반 원칙을 말하고 다음으로 세 가지 현실적 정책을 말해 보겠다.

양도의 일곱 가지 원칙

우리가 도달하려는 목표에 대해 다시 초점을 맞추는 일이 현명하고 유용하다.

첫째, 전체를 포괄하는 목적은 자치정부라는 역사적 목표를 성취하는 일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많은 강력하고, 독자적이며, 창의적이고, 시민 지향적이며, 무

엇보다도 책임있는 시민을 기를 필요가 있다. 이들이 없다면 우리의 목표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 목적을 소극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현 사회에 만연된 의존성, 수동성, 무책임성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튼튼한 가정을 가꾸는 일이 대단히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가정은 강한 인간성을 형성해 주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가정의 독립성을 강화해 주고 책임있게 행동할 동기를 고양시키는 정책을 통해서 우리는 거의 모든 개인들을 강하게 만들 수 있다.

셋째,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주도성initiative, 창의성, 기업가정신이라는 개인적 습관을 배양하는 일—대다수의 정부는 이러한 습관을 억압하고 있다—이 중요하다. 이것이 인간적 활력을 불러 일으키는 길이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 존재를 그들의 창조주의 이미지에 가장 가깝게 만드는 길이다.

넷째, 창조성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금이다. 따라서 모든 가정이 기금을 만들어 세대간에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공공정책의 목표이어야 한다. 지난 100년 이상 동안을 사회 개혁가들은 소득유지에 관심을 집중시켜 왔다. 그러므로 가정자본Family Capital의 형성을 강조하는 것이 그렇게 혁신적인 것은 아니다.

다섯째, 가정 내에서 자본을 형성하는 것은 빈곤이나 여타의 개인적 약점에서 벗어나는 유용한 길이다. 이것은 또한 국가로 하여금 힘겨운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

여섯째, 수십 년의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졌으므로 가능한 한 많은 결정을 전국적인 관료기구로부터 개인에게 혹은 적어도 지역 주체에게 양도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전국적인 기구와 지방기구 사이에 보다 창조적인 균형이 회복되어야 한다(이런 ‘균형’은 어떤 문제에는 위로부터의 개입이 공공선을 위해서 대단히 유용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리고 일곱째, 정부의 규칙과 규정, 특히 조세와 다른 경제활동에 관한 규정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조세와 규제법규의 복잡성은 하나같이 투명성을 막는 가리개이며 부패의 기회를 제공한다. 당신이 더 많기를 원하는 것(예컨대 성장)에 지나친 과세를 하지 마라.

일단 이 일곱 가지 원칙이 마음속에 확고하고 분명하게 자리잡으면, 많은 시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 많은 실행방안을 내놓을 것이다. 다음에 세 가지 권장사항을 말해 보겠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하겠다. 상이한 국가별 상황과 실제적인 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안은 다루지 않겠다.

세 가지 정책 제안

1. 연금 개혁: 칠레는 노인층에 연금을 제공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위에서 언급한 모든 일반원칙을 따르면서도 평화적으로 신속하게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담당 관료기구가 모두 사라져 버렸고 연금에 대한 정부의 관여는 단순화되었으며 각 개인과 가정은 전례 없는 독립성과 부를 향유하게 되었고, 칠레의 국민 저축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 되었다.

칠레의 새로운 체제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특징은 가장家長의 연금기금 중 가장이 일생동안 쓰지 못하는 자금은 그의 가족이 물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같이 함으로써 연금은 연금 수혜자가 살아 있는 동안만 유효한 소득 유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위한 자산이 된다. 이로써 당신이 생애동안 얻은 소득을 보다 많이 당신의 가족을 위해 투자할 동기를 높일 수 있다.

본질적으로 칠레의 연금법은 간단하다. 모든 임금소득자는 정부가 인정하는 상호투자 기금 중에서 하나를 고른 다음, 세금이 공제되는 연금 프로그램에 소득 중 규정된 만큼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금은 해당 임금소득자의 이름으로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직업을 구하든 그를 따라 다닌다. 자유와 창조성이 고양된다. 즉 개인적 인센티브가 향상되며 가정은 강화되고 국민저축이 크게 늘어나 국가 전체가 번영을 누리게 된다.

민주당 소속인 대니엘 패트릭 모이니한 상원의원은 최근에 이런 방향을 따르는, 매우 제한적이긴 하나 중요한 조치를 제안하였다. 그는 미국 공공 연금제도의 개혁가로서 오랜 기간동안 활동한 사람이다.

2. 의료저축 구좌: 위에서 언급한 일곱 가지 원칙을 충족시키려면 각 시민은 법에 따라 의료저축구좌를 열고 규정된 대로 소득의 일부를 사적인 구좌에 투자해야 한다. 이 구좌는 세금공제를 받을 것이며 개인적으로 투자하거나 가지고 다닐 수 있다. 즉 이 구좌는 개인과 그의 가족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다. 기금의 일부는 상당히 공제비가 높은(예컨대 미국이라면 1천5백 달러 수준) '재난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차감될 것이다. 나머지는 일상적인 병원비를 위해 필요한 만큼 꺼내 쓸 수 있다. 개인이나 가정이 그들의 생애에 쓰지 않은 기금은 유산으로서 다음 세대에 넘겨진다.

이 정책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특징은 이것이 정부의 보건기구를 대폭 감축시키고, 이를 개인적 책임으로 대체한다는 것, 그리고 시민들의 인센티브와 의료정책 결정권의 귀속을 극적으로 바꾼다는 점이다.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의료비의 부담도 거의

모두 없어져 버린다. 책임은 시민 각자에게 돌아간다. 의료보험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가정의 유산을 축적하는 방안이 된다. 이런 일이 있어선 안되지만, 만일 가정의 의료 구좌가 사고나 질병으로 바닥이 나면 재난 보험이 그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3. 단순화된 비례 소득세 : 노년층 연금 관료기구가 공공선을 위해 해체될 수 있음을 칠레가 보여 주었고, 의료저축 구좌가 의료관련 관료기구를 제거하지는 못해도 극적으로 감축시킬 방안을 제시하였던 것처럼, 국민 소득세 제도를 단순화하여 또 하나의 관료기구를 사실상 제거하는 일이 가능하며 그 자의성, 오만함, 우매주의, 편애주의 및 부패를 확실히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은 조세법규를 과감하게 단순화시키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정부가 실제로 거두어들이는 조세수입은, 그것이 정부에게 전달되는 비율인 조세비율과 동일하지 않다. 세율이 높으면 시민들은 행태를 바꾸어 예상보다 적게 낸다. 이를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부는 적법한 반면 일부는 불법이거나 비도덕적이다. 정부는 세율을 낮추고도 조세수입을 늘릴 수 있다. 물론 세율이 너무 높으면 조세수입이 상당히 감소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정부로 하여금 소득의 원천이 무엇이든 소득세율을 한가지로 설정케 하라 (예컨대 20퍼센트로). 그리고 소득 분포상 아래 쪽 반에 해당하는 가정의 세금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제해 주어라. 가정 내의 부모 한 사람 당 상당한 규모의 공제를 허용하고 자식(부양자) 별로 그 반을 공제해 주라.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엔 부모에 각각 1만2천 달러를 공제하고, 두 아이에겐 각각 6천 달러씩 공제하여 4인 가족의 경우 소득 중 3만6천 달러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 주라. 미국의 중간 소득이 3만6천 달러이므로 이 결과 모든 가정들 중 절반이 소득세를 공제받게 된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단순화가 될 것이다.

위와 같은 면에서 이 개혁은 가정家庭 친화적이다. 이는 온 가정에 적용되며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절감시켜 준다. 중간계층과 부유층은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세율은 똑같지만 1만 달러를 더 벌 때 내는 실제 세금(2천 달러)은 소득이 10만 달러 더 많아질 때의 실제 세금(2만 달러)보다 훨씬 적다. 모두에게 같은 세율을 적용하면 납세 준수와 투명성은 높아지고 세금 포탈과 부패는 줄어들 것이다.

단일세flat tax—모두가 그들의 소득에 비례하여 동일한 비율(공정성의 요체)로 납세하기 때문에 나는 비례세proportional tax란 말을 더 좋아한다—는 물론 논쟁을 자아낸

다. 미국기업연구소AEI는 단일세와 그것에 대한 주요 반대안(전국 판매세, 민주당 대표인 겐하르트의 5단계 “누진세” 개혁안 등등)에 대한 일련의 긴 논쟁들을 제공해 왔다.

위에서 제시한 비례세 또는 단일세에 대한 주요한 반대 이유 중의 하나는 그것이 “누진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당 대표인 겐하르트가 5단계 대안을 옹호하기 위해 제시하는 주요 반대 이유이다. 왜 그는 누진세를 주장하나? “주장이 필요 없다.” 부자와 빈자의 세율은 달라야 하고 이것이 어떻든 보다 공정해 보인다는 “직감 때문이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자신의 계획에 따르면 모든 납세자의 70퍼센트는 최대 10퍼센트만을 내게 된다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겐하르트에게 두 가지 반론을 하고 싶다. 첫째, 단일세율 하에서는 모든 납세자의 반(4인 가족 기준으로 3만6천 달러 이하 소득자)이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다. 5만5천 달러 이하의 경우 5.6퍼센트의 세율로(또는 그 이하로) 세금을 낸다(표 1을 보라). 이것은 겐하르트가 주장하는 10퍼센트보다 저소득층에게는 더 낮다. 전체의 90퍼센트 이상이 속하는 연간 소득 10만 달러까지의 소득자도 겨우 12.8퍼센트(또는 그 이하)를 넘으므로 겐하르트의 10퍼센트보다 거의 높지 않다. 단일세는 비록 누진성을 그 주요한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누진성”을 원하는 사람에게 겐하르트의 안보다도 더 큰 누진성을 제공하고 있다.

<표 1> 소득 수준별로 본 4인 가족 기준 단일세의 “누진성”

(단일세율= 20%)

총소득(\$)	조세대상 소득(\$)	실제 세금	평균 세율(%)
36,000 이하	0	0	0.0
50,000 이하	14,000	2,800	5.6
100,000 이하	64,000	12,800	12.8
200,000 이하	164,000	32,800	16.4
500,000 이하	464,000	92,800	18.56
1,000,000 이하	964,000	192,800	19.28

주: 소득이 증대하면, 36,000 달러 공제의 가치는 비례적으로 줄어 실제 세율은 올라간다.

두번째 주장은 이것이다. 하위 50퍼센트의 소득자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으므로, 누가 세금을 얼마만큼 내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재분배 효과는 상위 50퍼센트 소득자에 한정된다. 우리가 보았듯이, 미국의 경우 가계소득 중 50퍼센트는 3만6천 달러에서 시작한다. 게다가 가계소득 5만5천 달러까지의 경우 이들은 소득의 일부(5.6퍼센트

또는 그 이하)만을 납세한다. 누진성의 근거는 빈곤층의 납세 부담을 덜어 주는데 있다. 상위 40퍼센트에 속하는 소득층 중에서 누가 다른 층 보다 조금 더 많이(혹은 적게) 내야 한다고 싸울 가치가 있을까? 연 소득 5만5천 달러를 가난하다고 할 수 있는가?

다음과 같은 새로운 주장도 역시 적절하다. 나의 동료인 케빈 하세트는 단일세율안이 아니라 현재의 체제를 고수할 경우에 따르는 숫자(비용)를 다루는 논문을 쓰는 중이다. 단일세안의 반대론자마저도 단일세안의 효율성으로 인해 GDP가 5퍼센트 증가할 것이라고 인정한다(보다 현실적인 추산은 이것의 두 배 이상이다). GDP가 9조 달러이므로 5퍼센트라면 4천5백억 달러에 달한다. 따라서 현재의 복잡한 제도를 따르기 위해 단일세 제도를 반대하는데 드는 비용은 4천5백억 달러이다(실제의 비용은 훨씬 더 높아서 연간 1조 달러 이상이 될 것이다). 누진성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누진성을 유지하는 것이 (연간 경제 성장의 가치로 따질 때) 4천5백억 달러를 포기할 만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들이 성취할 누진성이란 전적으로 상위 40퍼센트의 소득자가 내는 세금의 비율을 재조정하는 작업이다. 그들은 상위 5퍼센트 또는 그 다음 15퍼센트 소득자가 현재 내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혹은 낮은) 비율로 세금 내는 일에 정말 그다지 관심이 많은가? 결국 단일(비례)세 제도를 수용하게 되면 하위 50퍼센트는 세금을 조금도 내지 않는 데도 말이다.

논의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는 현행 소득세에 대한 대체안으로서, 그리고 동시에 단일(비례)세에 대한 대안으로서 거론되고 있는 전국 판매세나 소비세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검토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이미 길어진 논문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결론

이 세 가지 정책 제안이 인간 세상에 신선의 나라를 열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제안은 적어도 우리 생활에서 거대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각 시민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시민사회 내의 단체에 힘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작은 발걸음이 될 것이다. 이 제안은 21세기의 정치사회사를 특징지을 국가로부터 시민사회로의 권한 양도이과정의 향한 신중한 발걸음이다.

내 친구는 이런 일련의 아이디어를 보편적인 가족자본주의야 명명하였다. 하지만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 그가 제안한 이름은 유럽의 편견을 자극할 지도 모른다. 유럽은 지난 150년 이상 동안 자본을 천시하였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일반 가정은 자본을 소유함으로써 큰 도움을 받기 때문이다. 자본축적을 여러 가정 속에 보편화하는 일은 가치 있는 목표이다.

논평

복지국가의 미래

앤서니 기든스

복지국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마이클 노박만이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아니지만, 노박이 이 질문을 우리 시대의 정책의 기본문제로 강조한 것은 아주 정당한 일이다. 복지정책의 개혁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다. 미래의 복지기구가 어떤 형태를 취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듯이 왜 개혁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다양한 진단이 있다.

노박의 견해에 접근하기 위해서 먼저 몇 가지 사항을 말해 두기로 하자. 유럽에서의 복지국가에 대한 견해는 미국의 그것과 아주 다르며, 이는 복지국가의 역할에 관해서로 다른 두 맥락에서의 진정한 차이를 반영한다. 유럽에서는 완전히 한 세대에 걸쳐 복지국가를 사회적 이동성과 번영의 도약대로 간주해 왔다. 복지 제도는 어쩔 수 없이 주도성initiative과 책임성을 약화시킨다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만 한다. 복지국가 자체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유럽국가 내의 복지 체제의 다양성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경험 사이에 존재하는 커다란 간극을 인식해 둘 필요가 있다. 우리는 또한 두 가지 형태의 잘못된 향수-내가 좌파적, 우파적이라 부르는 향수-에 대해서도 인식해야 한다. 좌파적 향수는 완전고용-이제는 그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위협에 처한-과 결부된, 복지국가의 황금기에 귀를 기울인다. 사정은 결코 그렇게 장미 빛만은 아니었다. 우파 비평가들이 말하듯 복지국가는 무책임한, 종종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관료기구를 낳았고 또 낳고 있다. 노박의 일부 논평, 예를 들면 복지국가는 우리를 타락시킨다이또는 복지국가의 국민들은 또 다시 노예가 되었다는 논평이 나에게서는 어처구니없이 들린다. 하지만 모든 형태의 복지국가에 있어 복지의존과 복지기만fraud은 현실적인 문제이며 만연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파적 향수도 그 반대의 경우 못지않게 잘못되어 있다. 이것은 결코 존재한 적이 없는 전통적 가정에 대한 동경이며, 국가에 의해 부패되었다는 사회적 연대의 자발적인 형태에 대한 동경이다. 노박의 글은 이 두번째 향수로 가득 차 있다. 거대한 정부는 참된 가정의 적이며 정부의 개입이 없었다면 어떻게 해서든 자발적으로 밑으로부터 제대로 성립되었을 사회적 질서의 적이다.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 맞게 행동하라이대신 지역에 맞게 생각하고 지역에 맞게 행동하라이는 격언만이 통용된다. 버크가 말했던 작은 집단platoon이 마치 잃어버린 현실인 양 사용된다. 우리가 지향해 가야 할 작은 도시사회에 비교할 때 복지국가는 파멸의 길에 이르게 할 뿐이라고 한다. 복지국가는 무의미하고 처벌적인 재분배주의이 인적 자본의 파괴이 창

조성과 힘든 작업에 벌금을 부과하며, 가정 생활을 파괴하여, 복지국가를 반대하는 가장 압도적인 근거야가 되고 있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비판되고 있다.

우리가 별로 설득력이 없는 이런 생각을 받아들여지게 되면, 유럽이든 미국이든 복지제도를 효과적으로 개혁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자본주의야 좌파의 저자들에게 허깨비였던 것처럼 우파의 저자들에게 복지국가는 허깨비가 되었다. 유럽 국가들이 보다 완벽한 복지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럽은 희망이 없는 상태에 있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복지국가는 소득을 두 가지 방법으로, 즉 생애의 주기에 걸쳐서 그리고 사회경제 집단들에 따라 분배할 수 있다. 비교 연구에 따르면 복지국가는 두 번 째보다 첫 번째 영역에서 상당히 더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유럽의 국가는 두 영역에서 모두 미국보다 더 성공적이었다. 노박은 미국의 경제는 번창하고 있지만 유럽연합의 경제는 그렇지 않은 듯이 쓰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수의 노동자 빈곤층이 있고, 하위 25퍼센트의 소득이 지난 20년 동안 실질적으로 정체해 있는 경제를 순수한 성공의 사례로 볼 수는 없다. 1988~1995년 사이에 미국의 경제는 주요한 서부 유럽의 국가보다는 더딘 성장을 기록했다. 실업에 관한 양상은 보통 우리가 가정하는 것보다 복잡하기는 하지만 유럽의 OECD 국가의 30퍼센트가 지난 1983~1996년 사이 미국보다 더 낮은 실업률을 보였다.

복지국가가 가정을 해친다는 관념은 우파 비판가들의 진부한 이야기이다. 그렇다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 이혼율이 가장 높고 사생아의 비율이 가장 높은 사회 중의 하나인 미국은 복지제도가 가장 약하게 발달한 사회이다. 실제로 복지의 지출과 이혼율이나 사생아의 수준 사이에 분명한 상관관계는 없다. 어느 경우이든 내가 이해하는 가정의 위기는 노박이 그럴 듯이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복잡하다. 우리가 역사가로부터 전통적인 가정에 대해 알게 되면 될수록, 이들 가정은 종종 더 억압적이었던 것처럼 보인다. 어린이 권리의 확산과 여성의 점증하는 법적 경제적 평등성은 후퇴시킬 수도 없고 후퇴시켜서도 안되는 진전이다. 가정의 위기는 해체의 위기가 아니라 가정에 영향을 주는 일련의 근본적인 변화와 그것을 둘러싼 제도, 즉 결혼, 성문제, 남-녀의 관계, 그리고 집과 직장의 관계 등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토니 블레어의 선거가 경제 운영체제로서의 사회주의의 실패를 확인시켜 주었다는 명제에 나는 이의를 달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마가렛 대처의 승리를 뜻하기보다는 대처주의의 실패를, 보다 일반적으로는 신자유주의의 실패를 확인해 준다. 신자유주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새로운 상황, 즉 세계화와 세계적인 경제경쟁의 격화라는 새로운 조건에 대응하려는 시도였다. 그것은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었는데 경제적인 자유주의와 도덕적 전통주의의 역설적 혼합에 적잖은 원인이 있다. 대처주의는 경제를 근

대화하려 한 반면 가정을 포함한 다른 영역을 탈근대화이하려 했다—이것은 노박이 취하고 있는 비이성적 태도이기도 하다. 다른 측면에서 대처리즘은 노박이 성취하기를 원하는 개혁과 완전히 어긋난다. 대처는 지방 위원회와 다른 기구로부터 권한을 빼앗아 중앙 정부에 주었으므로 대처주의는 권한양도의 적이다.

세계화와 이를 둘러싼 여러 세력들에 대응하는 일이 세기적 전환기에 있어서 주도적인 논제이다. 노박이 제시하는 것과는 달리 논쟁의 초점은 세계화에 대한 낙관론인가 아니면 동요인가—혹은 그의 생각대로 미국적 시각과 유럽적 시각의 대립이 아니다. 세계화란 영향력의 단일한 묶음이 아니라 경제, 정치,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전환의 복잡한 묶음이다. 이 전환에 대처하고 이득을 보려면 이 전환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세계화는 전지구적 시장과 무게 없는 경제, 즉 세계적 정보경제의 팽창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변화하는 국가의 역할에도 관계되며 동시에 가정에 영향을 끼치는 변화를 포함하는, 일상생활의 많은 변화를 초래한다. 세계화는 민족국가로부터 멀리, 그 위쪽으로 잡아당긴다. 즉 국가는 그 이전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정책결정들 중 일부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아래쪽으로 밀어 붙이기도 한다. 즉 국가의 하위수준에 있는 지역들의 자율성을 증대시키도록 압력을 가한다. 여기서 세계화의 힘은 노박이 말하는 분권화를 촉진하도록 도와준다. 동시에 세계화는 셋길을 쥐어짜 버린다. 즉 그것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지역들 및 새로운 연합관계들을 창출해 낸다. 이 현상은 게니찌 오마에가 잘 분석한 바 있다.

이 변화의 복잡성이 사회주의의 해체와 사회민주주의의 낙후성을 보여주는 배경이다. 유럽의 사회민주주의는 노박이 인정하려 드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업적을 쌓았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미래를 향한 길이 되지 못하며 다양한 형태의 복지국가는 근본적인 radical 재고의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여기서 근본적radical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좌파적인 경향을 뜻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좌파는 이 문제에 대해 대체로 보수주의자들과 비슷한 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복지지출을 삭감하는 방법을 찾으라는 의미도 아니다. 사회민주주의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많은 것을 갖고 있다. 우리는 현재의 복지체제가 대체로 사라져 버리는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성과의 보존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어떤 원칙이 복지국가의 개혁을 이끌어야 하나? 나라별 맥락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

1. 권한의 양도와 보조성의 이념이 정부와 복지국가의 재구조화에 핵심적이다야하고 노박은 말한다. 하지만 국가를 시민사회 속에 가라앉혀 버림으로써 효과적인 정부가 이룩되고 사회적 통합이 증진될 가능성은 없다. 정부의 재구축은 새로운 지역 정부의

형태뿐만 아니라 세계화의 움직임을 추적해야만 한다. 그것은 권한을 초국가적 기구에게 위쪽으로 양도함을 의미한다. 유럽 연합은 세계화의 표현이며 또 그에 대한 반응이라고 이해되어야 한다.

2. 경제적인, 개인적인 책임성의 발전은 복지제도의 근본적인 강조사항이어야 한다. 토니 블레어가 주장하듯 복지개혁은 이것을 지도적인 주제로 삼아야 한다. 복지의존성과 그에 수반되는 운명주의가 문화적으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한 곳에서는 새롭게 자발성과 자율성을 증진하는 일이 복지제도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집단적 책임의 원칙도 똑같이 중요하다. 사적인 물자제공은 개인이건 가족이건 또는 회사이건, 개인에 대한 집단의 책임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3. 가정의 고통은 복지국가의 의도되지 않은 결과야하는 노박의 주장에는 공공정책이 가정생활을 어떤 식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관념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 자체나 복지제도가 가족제도의 전개 유형을 결정지을 수는 없다. 만일 강력한 가정이라는 것이 장기간에 걸쳐 안정되고 관련된 당사자들을 지원하며 행복의 척도를 제공하고 어린이의 이익을 보호해 주는 가정환경을 뜻한다면 누구도 강력한 가정의 필요성을 문제삼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어려운 쟁점은 어떤 유형의 관계가 이런 혜택을 주며 어떻게 이 관계가 개인의 자율과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점이다.

4. 연금 개혁의 문제는 노박이 제시한 것보다 더 근원적인 접근방법, 즉 현대 사회에 있어서 변화하고 있는 노년층의 지위를 다루는 접근법을 필요로 한다. 노년은 문제가 아니라 기회로 여겨져야 하며 연약한 고령층의 욕구는 보다 일반적인 노년층의 욕구와 구분되어야 한다. 연금수혜자야하는 범주는 복지의존성이란 사회적으로 부담스러운 문화를 만들 수 있는데, 이는 젊은 집단에게 발견되는 어떤 형태의 복지의존성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적인 연금기금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5. 복지 개혁은 사람들의 생활에 있어서 위험과 안전의 새로운 균형을 이룩할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위험을 택하려는 자세는 위험 평가와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주도성과 책임감의 기본적인 부분을 구성한다. 복지국가의 많은 부분이 집단보험의 형태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보험의 경우와는 달리,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는 위험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복지국가는 수동적인 위험이라는 관념과 수동적인 안전이라는 관념 위에 세워졌다. 만일 당신이 병들거나 불구자가 되거나 이혼하거나 실업자가 된다면, 복지국가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하게 된다. 우리는 현재 훨씬 역동적인 위험이라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관찰은 세계시장에서부터 가족관계, 의료체

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복지체제는 기업가적인 정신에 기여할 필요가 있으며, 가속화된 변화의 세계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탄력성을 키워주어야 하고, 사태가 잘못 되었을 때는 안전을 제공해야 한다. 일을 위한 복지, 조세제도의 개혁, 그 밖의 여러 가지 아주 구체적인 정책이 이런 야심적인 목표를 추구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존 로이드

마이클 노박의 논증 스타일은 혼란스럽다. 사회민주주의는 적敵이다. 따라서 그것은 아노미 현상의 주범으로 지목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그는 사회민주주의체제가 아닌, 선진사회인 미국이 (부유한 국가들 중에서는) 독특하게 심각한 범죄문제를 갖고 있음을 어쩔 수 없이 실토해야만 한다. 아프지 않으면서 아프다고 국가에 사기를 치는 국민의 도덕적 해이가 더 좋은가 아니면 폭력적으로 강도짓을 하는 것의 위험이 더 좋은가? 이 양자 사이엔 아마도 상호 배치관계라도 있는 걸까?

노박은 사소한 이야기 거리로 슬쩍 넘어가 일반적인 인상을 예증하려 한다. 예컨대 관료제 때문에 다른 보조원을 고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바쁜 이탈리아 이발사의 이야기가 그 경우이다. 슬픈 이야기이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이 나라의 중북부 지역 실업률이 왜 3퍼센트 정도인지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이탈리아 남부의 실업률은 비참할 정도로 높고 그래서 전국 평균도 높다). 또는 왜 이탈리아의 카페, 가게, 차고와 민간 사무실에 왜 사람이 넘칠 듯 고용되어 있고 또 이탈리아의 중소기업이 왜 그렇게 역동적인지 설명하지 못한다.

유럽은 복지주의와 사회민주주의라는 곤경에 빠져든 예로써 보여져야 했다. 따라서 유럽 연합의 최대 프로젝트인 화폐통합에 대해서 논의해서는 안되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유럽 연합의 핵심으로써 참가국들로 하여금 공공부문 지출에 대해 최고의 엄격성을 강제할 -이미 강제하고 있다- 제도와 일련의 규칙을 만들 것이다. 또 부풀려진 유럽인 이탈리아에서 중도좌파 정부가 들어서서 정부 지출을 크게 삭감했고, 정부가 소유하고 있거나 통제하고 있는 산업과 서비스 부문을 민영화하는 중이며, 이들 기업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던 시대를 마감했고, 바티칸의 변함없는 축복을 받아 온 기독교 민주주의자들에 의해 수 십 년간 더럽혀진 국가에 대해 어느 정도의 신뢰를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서는 안되었다(나는 이탈리아의 경우를 강조했는데 왜냐하면 랄프 다렌도르프가 최근에 언급했듯이 프로디²⁾ 정부는 -노박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시대의 알려지지 않은 성공사례이기 때문이다). 또한

2) Romano Prodi, 이탈리아의 현 수상(역자 註)

독일이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산업국가라는 사실도 언급해선 안되었다. 또한 프랑스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마찬가지였다. 프랑스와 독일이 경제침체로부터 강한 탄력을 갖고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마찬가지로 언급해선 안되었다. 대서양의 한편에서 일어나는 붕괴는 다소 전반적인 것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미국의 회복은 다소 진정한 것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복지와 쇠퇴 사이의 상관관계,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주의와 성장 사이의 상관관계는 깨어질 수 없는 관계로 주장되어진다.

이것은 나쁜 논증 방식이며, 노박이 기술하려고 하는 현상을 어처구니 없이 제한되고 왜곡된 모습으로 짜 맞추려 하기 때문에 더욱 악화되었다. 복지주의는 생산, 생산성, 건강, 장수, 생활공간 등의 수준이 향상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당연히 복지제도가 있었던 모든 나라에서 전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소득의 향상이 이어지는 가운데서 전개되었다. 노박은 어빙 크리스톨을 인용해서 완전히 발달된 복지국가가 참호와 장애물로 방어되고 그 주변에 몰려드는 충성스런 사람들에게 안전과 보호처를 제공해 주는 현대판 봉건영주의 성애이라고 주장하며, 그 국가의 시민들에게 노예(노박이 제멋대로 사용하는 용어를 쓰자면)라는 신분을 부여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저소득층에서 태어난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으로부터 완충작용을 해 줄 뿐만 아니라 아픈 노인을 돌보고 무지한 젊은 층을 교육하는데 받침대 역할을 해 준 복지국가의 혜택을 받은 우리는 노예의 지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민주주의는 가정을 파괴한다는 노박의 주장은 악취미를 가진 농담에 불과하다.

그런 농담은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금세기 대부분의 기간보다는 좀더 심층적이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실용주의적 시각에서 정책을 검토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건강한 정치적 시점에 도달해 있기 때문이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그리고 점차 많은 다른 지역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이런 실용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정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박이 그의 글 끝부분에서 제기하고 있는 관심사를 기준으로 평가하건대, 그 근거의 상당부분은 노박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사회민주주의 제도가 완전히 실패한 토양 위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좌파 성향이든 우파 성향이든 사회민주주의 정부가 확립한 제도에 애착을 지닌 사람들이 부과하는 제약 범위내에서 활동한다. 전후 노동당이 이룩한 최고의 업적인 영국의 전국의료제도는 제공되는 서비스 당 사용된 금액을 따지면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제도의 하나로서 유권자의 강력한 호응을 받기 때문에 어떤 정부도 이 제도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을 서약할 수밖에 없다(실제로 이 때문에 이 제도를 개선할 방법에 대한 사고思考를 질식시키고 있다).

새로운 실용주의는 각기 다른 좌파, 우파 정부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제도와 메카니즘의 가운데서 그리고 그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노박이 말한대로 마가렛 대처가 신

노동당 탄생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그러나 과장법 때문에 분위기를 깨 버렸다. 대처가 모든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보모국가로부터 신노동당이 젖을 때도록야하는 과정에서 특히 실업자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국가의 지출을 증가시켰다. 그런데 실업수당보다 더 보모국가적인 지출은 없다). 하지만 국영화된 기업의 예외를 제외한다면 대처가 전후의 사회민주주의적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꾼 것은 없다. 이 과제가 좌파적인 이탈리아의 좌파인 올리브나무연합에게,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의 사회민주주의자들에게 넘겨졌던 것처럼,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프랑스의 사회주의자들과 독일의 사회민주주의자들에게 넘겨질 것처럼, 이 과제는 신노동당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받아들여졌다.

이들 집단은 개혁의 과제에 대해 상이한 전통과 대응방법을 갖고 있다. 단기적으로 보다 중요한 점은 이들이 접근하는 문제의 지평이 상이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집단은, 특히 신노동당은 이념적 가리개를 접고 그들의 (좌파로서의)정치적 정당성이 아니라 정책의 효과성이란 측면에서 정책을 검토한다. 노박이 제시하는 개인휴대형 연금, 의료저축구좌, 비례적 소득세 등의 아이디어는 개방적인 자세를 지닌 정부가 검토해야만 할 아이디어 모음집의 일부일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다. 이런 아이디어는 항상(노박의 글에서처럼) 평범한 사람이 어리석은 정치인들에게 당연한 것을 지적하는 투로 제시되지만, 그것을 그대로 실현하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시민들은 노예가 아니고 그들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또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반대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 복지개혁 장관이던 프랭크 필드가 추진했던 신사고적 복지국가론은 엄청난 어려움에 부딪혔고, 필드와 그의 각외장관이던 해리엇 하먼은 8월의 개각 때 해임되었다. 필드는 이 분야에 가장 정열적으로 관여했고 가장 전문적인 정치인이었다. 그의 정치적 실패는 민주주의에서 복지체제를 재구성하는 일이 두려울 정도로 어렵다는 사실을 나타내 준다.

일반적인 원칙들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일이 나올 것 같다. 노박은 이러한 원칙들 중 가장 중요한 원칙, 즉 전체를 포괄하는 목적을 긍정적으로 기술하면서 그것은 강력하고, 독자적이며, 창의적이고, 시민 지향적이며, 무엇보다도 책임 있는 수많은 시민을 기를이필요에 있다고 본다. 혹은 소극적으로 말한다면, 현 사회에 만연하는 의존성, 수동성, 무책임성을 줄이는 일이라고 한다. 누가 동의하지 않겠는가? 나는 복지국가가 이런 목표의 파괴자였다기 보다는 이런 목표를 촉진해 왔고 아직도 촉진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밝혔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현 체제가 개선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다음 사항들은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 빈곤층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유층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많은 경우에는 현 수준의 세금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 노동계급은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최저층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국가는 노년층, 병자, 정신병자, 극빈층에 대한 어떤 종류의 지원을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는데, 이는 복지국가가 낭비적이며 많은 빈곤층은 무책임하다는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는 듯하다.
- 부분적으로는 이런 제약 때문에 복지국가는 근본적 재조정을 필요로 한다. 건강, 사회보장, 무엇보다도 연금에 대한 복지국가의 약속은 현재의 수준으로 지켜질 수 없다. 가능한 유일한 방향은 생활의 비극적 사태와 피치 못할 경우에 대한 보험의 책임을 개인과 가정에 돌리는 일이다.
- 많은 나라에서,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 많은 자금이 편부모(대개 홀어머니)를 지원하기 위해 쓰인다. 그리고 상당량의 복지기금이 기만적인 fraudulent 요구에 잘못 배정되고 있는 듯하다.
- (전부는 아니라도)일부의 조치에 의해 사회적 유대감 -어떻게 측정하든- 이 약해지고 있으며, 개인과 가정은 점점 아노미적 행태에 기울어지고 있다. 장소 또는 계급에 따르는 유기적 공동체는 훨씬 약화되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가 있으며, 만들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많은 사람에게 낯설고, 특히 교육의 혜택을 못 받은 층에게, 그리고 -대개의 경우- 소득이 낮은 층에게는 낯설다. 인터넷은 진정한 이익 공동체이지만 이것은 필연적으로 빈곤층과 무지한 층에겐 배타적이다.

노박이 지적하듯 사회주의의 붕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동적인 실험장치를 제거해 버렸다. 더 많은 사회주의이-이는 부유층에 대한 더 높은 세금, 공공 소유권, 국가 계획과 강력한 노동조합을 의미한다- 는 현실적 대안이 아니다. 생활급을 줄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자는 굶어죽도록 복지가 감축된 순수한 자유시장체제도 역시 당면한 문제에 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아주 극우적인 정부도 그렇게까지는 시도해 보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적어도 자유시장체제가 현재의 문제에 답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 보인다. 우리가 (영국의 경우라면) 1906년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테니까 우리는 복지냐 아니냐의 선택이 아니라 어떤 복지일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나는 선택의 원칙을 노박과는 좀 다르게 제시하겠다. 우리가 수동적이지도 않고 의존적이지도 않은 개인을 원한다는 점에 나도 동의한다. 그러나 이 능동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은,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한에서는 복지국가적 요소를 포함하는 사회

속에서 능동성과 독립성의 가능성을 도출한다.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최소한의 품위를 보장해 줄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정 그리고 더 큰 집단에게 그들의 직접적인 친척, 친구, 동료 이외의 보다 큰 공동체에 소속된다는 의식을 주기 때문이다. 국가적 -유럽에서는 점차적으로 전 유럽적- 수준의 결정은 모든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노박이 강화하고자 하는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것들이 모든 시민들에게 비교적 공평하게 돌아가려면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한다. 노박은 이를 의존성이라고 본다. 나는 -전에 노동당의 지도자였던 닐 키노크가 정치용어로 만들어 낸 말을 사용해- 그것을 활력화라고 본다. 물론 이렇게 보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임을 인정할 준비는 되어 있다. 하지만 수동적, 노예적, 의존적이란 개념을 쓸 때 우리가 과학적인 것은 아니다.

어디에서나처럼 미국에서도 새로운 좌파적 접근방법은 그 일반적 형식면에서는 분명히 우파의 그것과 비슷하다. 문제는 어떤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접근방법은 공동체의 새로운 행동양식을 모색한다. 즉 일상적인 활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는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도록 사람들간에 서로 격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강화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서로에 대하여 무법적으로(즉 거의 범죄에 가깝게) 행동할 수 있고 가끔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이 때문에 사회생활이 저급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그 해결을 위해 반드시 국가가 적게 개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역 기관의 힘과 자발적인 서비스를 통하여 공동체적인 연계와 반응방식을 재확립하기 위해서는 종종 국가가 더 많이 개입해야 한다. 적어도 처음에는 공동체의 자발성이 자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자발적 공동체를 시도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영국의 예를 들어보겠다. 현 정부와 지난 정부는 '침체하는' 또는 가난한 학교를 선택해서, 가외의 자원을 공급하고, 새로운 선임교사를 배치하고 (종종 학교를 실패케 만든)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철저한 감독을 맡았다. 우리가 관찰할 만한 기록을 갖고 본 결과, 이론적으로든 실제적으로든 이들 학교는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을 회복하게 되었고 국가는 손을 뗄 수 있게 되었다. 지역에서 선출된 운영위원들도, 학교 관리자들도, 어떤 경우에는 학부모들도 학교가 뒤쳐지기 시작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의 경우 관심을 가진 학부모들은 문제의 시정을 위해, 또 필요한 자원의 공급을 위해 중앙정부에 호소해야만 했다. 이것이 의존성인가? 아니면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반응인가?

이것은 신좌파가 쓰는 책임성이라는 용어의 사용법을 예시해 준다. 현 정부는 우파의 영역이라고 여겨진(모든 좌파가 그렇게 보진 않았지만) 영역에 깊숙히 발을 들여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책임성이란 주제를 계속해서 강조한다. 이 영역이 우파에 의하여 구획지어졌다는 지적은 옳바르다. 그러나 그들의 지도는 부분적이며 주요한 곳이

비어있다. 책임성이란 기준을 가져야 한다. 준비되어야 한다. 종종 훈련을 필요로 하며 때로는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아 효율성과 기대치를 높일 수 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가는 간단하지도 확정되어 있는 사항도 아니다. 그것은 결정적으로 의무감에 달려 있는데, 이 의무감이란 자신이나 가족들의 행동에 대한 관심을 비롯한 여러 가지 영향력의 산물이다. 신노동당은, 특히 수상은 (적어도 수사법 상으로는) 권리보다도 의무를 강조한다. 토니 블레어는 의무를 시민사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며, 현재 기독교인이 쓰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수상과 다른 사람들이 수사법적으로 사용하는 강력하고 모범적인 도구이다(내무부 장관인 잭 스트로가 의무를 열렬히 사용한다). 아주 반사회적이고 비문명적인 자들은 필연적으로 이러한 의무나 모범적인 생활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기가 쉽지만, 의무의 강조가 반사회적이며 반문명적인 효과를 갖는 쾌락주의에 대한 강력한 해독제여야 하며, 또 실제로 그렇다. 그러나 신좌파가 신우파와 다른 점은 신좌파는 시민의 불평등한 지위가 분명히 표현되고 어떤 식으로든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한 관심을 의무사항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 시민들이 사회, 가족, 동료들에 대해서 지고 있는 의무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의무보다 더 힘든 것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좌파주의자들은 활력을 주는, 혹은 보다 더 논쟁적으로 말해서 재분배적인 장치를 마련해 의무의 수행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빈곤층 또는 박탈된 층의 매수되기 쉬운 성격과 범죄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시도라고 우파에 의해 비웃음 거리가 되고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여기서, 현재의 신노동당의 정책 실현 과정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권리와 의무는 필연적으로 그리고 정당하게 물질적·비물질적 재화에 대한 획득 가능성의 문제를 포괄해야 한다¹고 신좌파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논의가 논쟁적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좌파와 우파 사이의 논쟁거리가 아니라 좌파 안에서의 논쟁거리이다. 좌파내에서 이러한 논쟁이 있다는 것은 이 논쟁이 노박이 희화화하여 짜 맞추려고 하는 모습과 거의 유사점이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사실상 우리는 아직도 재분배 정책을 추진한다. 조세부담률의 한계치는 부유층에게는 더 높다. 노박 자신도 말하듯이 그의 20퍼센트 공동조세율도 부유층으로부터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더 많은 부담을 지운다. 문제는 우리가 현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는 세율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재분배 정책을 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 질문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노박의 글은 현재 우리의 논쟁이 역설적인 어떤 면을 갖고 있음을 밝혀 준다. 비록 너무 단순한 것이기는 하지만 좌파가 우파의 영역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좌파가 그 영역 안에서 좌파적인 목표, 즉 보다 많은 기회균등,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모두에게 대중에 대한 책임성을 엄격히 묻는 일, 두터운 층으로 이루어져 있

는 다양한 시민사회 등을 추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논의의 많은 부분은 과거와 같은 이념적 경직성을 갖지 않는다. 공산주의의 붕괴와 사회민주주의 실천방안의 재편성은 이런 경직성을 해소했다. 이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은 살아남기 위한 어떤 목표인 동시에 여전히 공공선을 추구하는 좌파의 전통, 반응방식, 실천방안에 대해 -과거에 놀랄 정도의 기여를 했던 것처럼- 무엇인가 기여할 바를 남겨 준다.

사회민주주의의 전통

폴 오머로드

마이클 노박의 글은 미국 우파의 전형적으로 잘못된 승리감을 나타내고 있다. 강력하고 성공적이며 실업률도 낮은 자유시장적인 미국경제가, 복지국가의 도덕적·재정적 부담 때문에 자신감도 일할 의지도 위축된 유럽의 무기력한 좌파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현실은 다소 복잡하다. 물론 미국이 금세기의 대부분 기간 동안 단연코 세계에서 유일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중요한 경제였다는 점은 사실이다. 미국의 평균 생활수준은 세계의 어느 산업국가보다도 높다. 국가별, 시간별로 이런 문제를 가장 체계적이고 완벽한 비교를 통해 연구한 저작이 앵거스 매디슨에 의해 1995년에 발표된 바 있다. 그의 추산에 의하면 1990년대 중반 미국의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은 유럽 대륙의 주요 산업국가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보다 대략 25퍼센트 가량 높다.

그러나 노박이 경제와 사회의 내재적인 역동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소개한 여러 국가의 경제성장률로 보면, 미국이 국제적으로 특별히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표 1>은 미국과 주요 유럽국가의 1인당 성장률을 여러 시기에 걸쳐 나타내 준 것이다.

표의 줄은 각각 다른 측면을 보여 준다. 첫 줄은 20세기 전반全般에 걸친 성장률을 보여주는데, 유럽 대륙 국가들이 장기적으로는 미국보다 조금 더 빠르게 성장했음을 나타낸다. 달리 말하면 미국은 이미 1900년경에 생활 수준의 면에 있어서 앞서가고 있었다. 그런데 퇴영적인 유럽인들이 평등과 복지국가에 이해할 수 없는 애착을 보인 20세기를 거치면서 생활수준의 격차가 벌어진 게 아니라 점차 줄어들었다.

두 번째 줄은 유럽의 복지국가가 전성기에 이르렀던 시기인 1950년 이후의 연평균 성장률을 나타내 준다. 경제의 역동성이 손상되기는 커녕 유럽의 복지국가는 이 반세기 동안 대단히 빠른 성장률과 공존하였다. 물론 가장 빠른 확장의 기간은 전쟁의 폐허에서 벗어나 재충전하던 1950년대와 1960년대로서 회복과 급성장이 예상되던 기간이기도 하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 증거를 보면 유럽이 복지주의 때문에 해를 입었다

고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표 1> 1인당 실질국민소득의 연간 성장률

기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1900~97	1.8	1.4	2.0	1.9	2.4
1950~97	2.0	2.0	2.7	3.3	3.5
1980~97	1.6	1.8	1.4	1.6	1.6

출처: 1990-1994는 매디슨; 1995~1997은 OECD 국가별 지표로부터 필자가 추산

비고: 소득은 1990년 기준 Gary-Khamis dollar로 계산하였다.

노박은 물론 많은 자유시장 우파의 논자처럼 이런 불리한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서 스웨덴 경제학자인 군나르 미르달과의 대화를 증거로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표 1>의 마지막 줄에서는 레이건 대통령이 선출된 1980년 이후의 성장률을 비교해 보았다. 미국은 이 기간 동안 좋은 기록을 보였지만 복지국가에 깊게 몰입한 서독이나 이탈리아보다 빨리 성장하지는 않았다.

20세기의 오랜 기간 동안, 특히 1945년 이후 유럽의 정부는 다양한 정치적 이름을 내걸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노박이 말하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이었다. 노박에 따르면 이는 두말할 필요 없는 실패의 처방전이다. 사회민주주의자는 성장과 기회를 만들어 내기보다 곤궁한 자를 돕는데 보다 많은 에너지를 집중시키기 때문이다. 그들은 실적을 보상하는 인센티브보다 분배에 우선순위를 두어 왔다. 이런 주장은 정치적 수사로서는 멋진 말이지만 경험적 사실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무기력한 사회민주주의 국가는 적어도 자유시장경제의 미국만큼 빨리, 더욱이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는 더 빨리 성장하였다.

노박의 글을 보면 그가 이런 단순한, 그러나 그의 시각에서 보면 압도적인 증거를 알고 있다는 표시를 찾을 수 없다. 그 대신 우리는 교황의 긴 주장을 들어야 했다. 물론 교황은 자본주의의 역동성에 관한 이론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는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모델이 미래에는 더 이상 타당하지 않을 것이란 예측에 관한 얘기를 한참 들어야 했다. 아마 타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예측이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정말로 노박 자신이 이란 왕의 몰락과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예로 들면서 어떻게 전혀 예측할 수 없던 일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느라 애를 먹었다. 전문적인 경제 예측가들이 단지 일 년 앞의 경제 성장을 예측하는데도 정말로 황당한 결과를 내는 점을 감안한다면, 장기간의 성장률 예측을 바탕으로 한 논증은 전혀 가치가 없다. 최근에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대변란은 이 점을

결정적으로 잘 보여 준다. 1997년 5월까지만 해도 IMF는 이 지역에 7퍼센트의 성장을 예측했었고 아시아 모델은 미래의 길로 찬양되었다.

물론 우리의 논의가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에서는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전통적인 가정(家庭)의 쇠퇴는 도덕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기능적인 이유에서 관심사이다. 내가 캠브리지 대학의 밥 로오손과 함께 썼던 것처럼, 이혼의 증가는 직접 관련된 개인이 만들어 내지 않은 비용을 나머지 사회에 부담시킨다. 따라서 이런 경향을 되돌리려고 시도하는 것은 공공정책의 정당한 관심사이다. 그렇지만 이 논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없이 전반적인 복지국가의 달성 정도와 전통적인 가정의 쇠퇴 정도를, 여러 나라에 적용될 수 있도록 보편적으로 연결짓기는 매우 어렵다. 가장 커다란 변화 중의 일부가 일어난 곳은 복지국가에 대한 애착이 극단적인 두 나라, 즉 미국과 스웨덴이다. 약한 복지국가와 강한 복지국가 모두 가정 구조상의 대규모 변화를 겪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아마도 <표 1>의 증거를 볼 때 역설적이게도 유럽은 지난 20년간 불충분한 성장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를 겪었다. 가정 정책과 관련하여 이 주제는 독자적인 하나의 논문 자료가 될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압축된 내용이다.

미국은 찬양받을 만한 많은 요인을 갖고 있다. 미국인의 자신감, 자원, 낙관론은 역사적으로 잘 알려져 왔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때때로 자신감의 결여로 고민하였지만 일반적으로 그들은 유럽인보다는 낙관적인 인생관을 가졌다. 물론 유럽은 미국과는 달리 금세기 들어 두 차례나 파멸적인 전쟁을 치렀고 수백만 명을 전쟁으로 잃었다. 예컨대 이런 역사에 대한 참여한 의식이 유럽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통일하려는 오도(誤導)된 계획의 주요한 밑받침이다. 보다 실용적인 측면을 말하자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회사가 유럽에서 나타나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세계적으로 군림한다는 것을 생각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제 수준에서 볼 때, 미국의 생산성은 지난 20여 년 간 사회민주주의적인 유럽보다 느리게 -빠르게가 아니고- 성장했다. 1980년 이후 미국과 유럽은 대단히 유사한 개인당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 미국에서는 이로 인해 실업률을 떨어뜨릴 수 있었지만 유럽의 실업률은 올라갔다. 달리 말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유럽은 미국보다 빠른 경제 성장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유럽의 생산성의 증가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똑같은 수의 직업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생산량을 더욱 증대시켜야 한다.

높은 실업률은 미국의 유연한(이)노동 시장에 비해 유럽의 노동시장이 경직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가 되어 버렸다. 노벨상 수상자인 미국의 로버트 솔로프는 1997년 11월 영국 한림원의 강연에서 이 견해에 대해 강력한 반론을 펴면서, 변화가 있었다면 미국의 노동 시장은 1980년대에 덜 유연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반면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엔 이런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전통적인 견해가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가지고는 있어도 그것은 불충분한 경제 성장률이 실업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상당히 덜 중요하다. <그림 1>은 오일 쇼크 전후의 연간 실업률 변화를 OECD 여러 나라의 연간 성장률의 변화와 대응시켜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지난 20여년 동안 평균 GDP 성장률은 떨어졌고 실업률은 올라갔다. 그림을 보면 양자는 매우 분명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성장이 지체될수록 실업률의 증가는 크다. 예컨대 극단적인 경우인 스페인은 좌측 상단에 위치해 있다. 아래 축을 읽어보면 1974~1995년 사이에 스페인의 연평균 GDP 성장률은 1960~1973년 기간의 그것보다 4퍼센트 이상 낮았다. 그림을 옆으로 읽어보면 스페인의 실업률은 거의 12퍼센트나 올라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또 다른 극단적인 경우인 미국과 노르웨이의 평균 성장률은 1퍼센트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고 두 나라의 실업률 증가는 2퍼센트 정도에 그쳤다.

OECD 전체를 보면 오일쇼크 이후의 기간 중 성장률의 감소가 실업 증가의 75퍼센트를 설명해 준다. 그림에는 빠져 있는 사회민주주의 국가가 셋 있는데—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스웨덴— 이들 국가는 성장률의 저하에 비해서 실업률의 증가는 대단히 적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실업률의 증가는 성공적으로 억제되고 있다. 미국의 경험은 OECD 전체의 경험을 완벽하게 대표하고 있다. 1970년대 중반 이후의 미국의 성장의 하락을 고려한다면 실업률의 변화는 거의 완전히 설명이 된다. 미국의 성장률은 다른 모든 OECD 나라보다 적게 하락했지만, 오일 쇼크 이전에는 미국의 성장률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훨씬 낮았다.

간단히 말해 유럽의 실업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보다 빠른 성장이 요구된다. 그러나 빠른 성장이 이른바 케인즈적인 수요관리 정책에 의해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는 유럽이 펼치는 사업의 이윤과 관련된다.

유럽의 이윤은 1980년경 저점을 지나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도 두 가지 면에서 불충분하다. 첫째, 이 기간 동안 국민소득 중에서 이윤이 차지하는 부분의 평균비율은 1960년대, 1970년대 보다 훨씬 낮았다. 이는 자본주의의 원동력인 장기적인 기대 long-term expectation—케인즈가 말하는 동물적 정신아를 억누르는 역할을 한다.

둘째, 미국과 비교를 해 볼 때 보호장벽으로 둘러싸인 산업부문에 이윤이 축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윤의 수준이 어떠한 혁신하고 확장하려는 동기가 미국보다는 약하다.

유럽에서 적절한 이윤율이 확보되지 않는 이유는 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문제의 상당부분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20여년 전에 제안되었던 초기의 환율조정 메카니즘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화폐통합을 위한 준비는 오랜 기간동안 긴축적인 화폐정책을 유도하였다. 이것의 결과 중 하나는 심하게 평가절상된 환율이었고, 이는 최근에서야 부분적으로 반전되었다. 예컨대 1980년대 초기와 1990년대 중반 사이에 마르크화는 달러에 대해 실질적으로 35퍼센트 절상되었다. 우리가 경제학의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하나의 교훈은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화폐가치가 절상되게 되면 이윤율을 깎아 먹게 되고 장기적인 성장을 감소시킨다는 점이다.

간단히 말하면 여러 형태의 자본주의는 각각 강점과 약점이 있으며, 모두 완벽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체제이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사회민주주의 모델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믿게 할 만한 특이한 사항은 없다. 직종 전체를 또는 산업 전체를 쓸어버리는 기술발전이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세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런 혁신을 고무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자본주의를 다른 체제와 구분시켜 주는 것이다. 여러 가지 기준을 갖고 보면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기간이 현재보다 더 세계화의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바로 이 시기 동안에 근대적 복지국가의 기초가 놓여졌다.

다른 많은 우파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노박은 유럽의 사회민주주의가 현재도 그러하고, 항상 실질적으로 보다 큰 분류인 자본주의의 한 유형인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의 레토릭修辭, 제도, 많은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 다수의 미국 공화당원들이 설파하는 철두철미한 자본주의와는 다르지만, 사회민주주의의 핵심에는 자본주의 경제의 작동을 위해서 요구되는 근본적인 조건—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사유 재산권의 존재, 특히 혁신과 이에 관련된 이윤의 흐름에 대한 재산권의 존재와 법에 의한 지배—을 지키려는 강한 약속이 있다.

20세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사회민주주의자는 국가와 국가의 활동을 진보의 수단으로 보았다. 산업자본주의의 첫 세기는 기껏해야 처참하다고 묘사될 수 있는 노동자 계급의 생활방식을 연상시킨다. 1844년 쓰여진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영국 노동계급의 상황』으로부터 1907년 쓰여진 로버트 트레셀의 『낮은 바지 입은 박애주의자』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고전적인 팸플렛과 소설들은 운 좋은 소수가 누리는 풍족한 생활을 대비시키는 가운데 대다수의 인간이 날마다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모습을 직설적으로 묘사하였다.

국가는 이런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메카니즘으로 간주되었는데, 메시아를 기대하는 저작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억제와 전복에 의한 상황개선을 기대하였다. 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국가는, 예컨대 작업일수를 제한하거나(어린이에게 10시간 노동은! 오, 하나님 이런 주장을 하는 사회주의자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제 아이를 굴뚝청소하러 더 이상 보낼 수는 없단 말입니다) 노동자의 조직을 허용하거나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삶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사태를 조정하는 수단으로 보여졌다.

그러나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면 급진적 전통에서는 국가를 억압의 수단으로 보고 증오하며 두려워하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 영국 혁명 과정에서 평등주의파는 크롬웰이 그들에 대해 참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도 크롬웰과 그의 국가에 대해 참을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태도는 오랜 기간이 지나서도 계속되었고 노동자 계급이 초기에 가졌던 자본주의에 대한 방어적인 반응이 20세기에 들어서까지 지속되었던 것은 이런 전통을 반영한 것이다. 노동자들은 보건을 위한 상호부조 조직, 노령과 실업을 위한 저축, 심지어는 자조적自助的 교육체제까지도 만들었는데, 이런 제도는 종종 국가가 제공하는 유사한 서비스와 병행되었고 그것을 보완하였다.

사회민주주의자들 사이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가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토론은 이러한 오래된 급진주의적 전통을 되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국가는 두말 할 필요없이 진보의 도구였다. 노박도 인정하듯이 복지국가는 인권, 전례 없는 수준의 변형, 의미 있을 정도의 생명 연장, 노년층 생활의 질적 향상 등과 양립한다.

그러나 국가만이 계속해서 사회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태도는 슬프게도 유럽 좌파의 많은 구성원들 사이에서 지속되고 있으며 그 때문에 이들은 노박류의 과격한 공격을 받게 된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영국의 지방 기관은 많은 수의 중산층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장악되었다. 그들의 전반적인 지적 능력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든 간에, 그들은 자신들의 숫자를 늘리고, 자신들을 재평가하고 진급시켜 보다 많은 봉급을 받지만, 동시에 예산을 삭감시켜 버려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은 점점 나빠지게 하고 있다. 정말 끔찍한 능력이다. 이와 관련된 분야의 이야기인데 최근 들어 훈련 및 사업위원회의 성과를 감시하기 위해서 업무평가부서를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고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장의 힘에 맡겨 두게 되면 충분히 해결될 문제이다. 즉 지역의 회사들로 하여금 이 위원회의 업무들 중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맡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부서의 장관은 20명의 전임직원full-time staff에 더해서 500명에 이르는 임

시직원까지 배정받게 된다. 아, 고스플란³⁾이여! 바로 오늘날에도 살아 숨쉬는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유시장에 대한 애착을 보면, 노박은 자본주의의 강점과 탄력성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적인 견해를 취한다. 자본주의는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온 유일한 경제체제이다. 소련 블록의 계획경제체제는 진실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리하여 1960년대까지만 해도 많은 미국인은 그들이 소련에 의해 경제적으로 추월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그러나 계획체제는 산업화와 자본축적의 초기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적응할 수 없음이 입증되었다.

자본주의의 성공은 엄청나게 다양한 정치체제와 제도를 배경으로 해서 이룩되었다. 일본 자본주의의 초기상황, 금세기 전반기에 독일이 겪은 경험, 보다 최근에 동아시아 국가의 경험을 보고 판단한다면 자유민주주의조차도 자본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번창하는데 필요조건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20세기가 끝나가는 지금 일군의 서구국가들은 지난 100년 이상을 대체로 비슷한 수준의 경제성장을 겪었으며, 대체로 유사한 수준의 1인당 소득을 갖고 있고, 모두 그 이전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던 부를 누리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사회정의를 달성하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판명된 것은 사회민주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다. 개인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리고, 복지 프로그램을 유지해 갈 수 있고, 보답없는 힘든 일과 고역스런 삶으로부터 수백만을 해방시킨 것은 느리지만 꾸준한 성장을 이끌어 낸 자본주의의 능력이었다. 예컨대 엥겔스와 트레셀의 저작을 갈라놓는 60년의 기간 동안 영국의 실질임금은 대략 두 배로 늘어났다. 트레셀의 저작에 나오는 에드워드라는 페인트공이 겪은 노동조건은 우리가 오늘날에 보는 조건보다는 훨씬 나빴지만, 경제성장을 거쳤기 때문에 그 조건은 1840년대의 그의 선배들이 견뎌야 했던 조건보다는 훨씬 나았다.

사회정의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민주주의적 프로그램의 효과는 경제성장을 통해 달성된 사회정의를 비한다면 2차적인 중요성밖에 가질 수 없다. 더구나 이중 많은 프로그램이 전혀 예상치 못한 해로운 결과를 낳았다는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런 결과는 근대 경제와 사회라는 극도로 복잡한 체제를 관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난다. 사실상 1980년대 미국의 자유경제의 열렬한 지지자들은 맨하탄의 현재 상태—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달러를 상여금으로 받고 축하를 하며 백만 달러라면 ‘팁’ 정도로 여기는 동안, 수천의 동포가 무료로 제공되는 점심을 얻어먹기 위해 줄을 늘어서고 있는 상태—를 그 결과로서 의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3) Gosplan, 옛 소련의 국가계획위원회(역자 註)

여러 면에서 『국부론』뿐만이 아니라 『도덕감성 이론』을 쓴 아담 스미스는 근대 최초의 사회민주주의자의 한 사람이다. 스미스는 경제와 사회가 기능할 수 있는 도덕적 환경을 강조하였고 국가의 역할은 바로 이런 틀을 지지하기 위해 권력을 잡는 일이다. 예컨대 스미스의 특별한 관심사 중의 하나는 노동분업이 노동하는 빈곤층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노동분업이라는 조직원리는 물질적 관점에서는 엄청난 이익을 가져오지만, 이것은 많은 개인들이 합리적인 대화를 즐기거나 거기에 끼어들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너그럽고 고상한 또는 부드러운 감정을 생각하지도 못하게 한다. 이 스미스에게 있어서 국가는 모든 시민이 적절한 수준의 지적·사회적 ‘미덕’을 발휘하기에 충분한 만큼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이 문제와 씨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지니고 있다.

지난 세기의 전환점에서 유효했었던 진보의 모델에 매달려 있는 일이 순진한 것처럼, 전혀 없는 부와 번영의 시대에 서구국가가 복지국가를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일은 우스운 일이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의 지도원칙은 그 실천적 표현이 무엇이든간에 아담 스미스의 시절에 유효했던 정도로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다. 그리고 사회 안에서 움직이는 인간 존재에 대한 사회민주주의적 견해, 그리고 서로에게 의무를 진다는 사회민주주의적 견해는 시장에 기초한 성공적인 경제기능과 완벽하게 양립해 왔고, 현재에도 전적으로 양립하고 있다.

답변 : 상당한 정도의 공동의 장이 있다

마이클 노박

먼저 감정을 나게 하고 방어심리를 촉발시킨 나의 용어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싶다. 평자들이 이런 점을 가능한 한 간략히 넘겨 버리고 상당한 정도의 공동의 장을 발견한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미국과 영국 모두 지난 20년 동안 대단히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는 쓸데없이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일을 없애야 하며, 협조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서로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나의 답변은 이 훌륭한 세 사람의 비평가와 나 사이에 놓인 공동의 장을 강조할 것이며 남겨진 차이점은 두 번째로 다루려고 한다—그렇다고 차이를 무시하지는 않는다. 나는 폴 오머로드가, 예를 들어 내가 자본주의의 강점과 탄력성에 대해 너무 비관적 견해를 취한다고 꾸짖는 것을 특히 좋아했다. 나는 아담 스미스에 대해 그와 똑같은 견해를 갖고 있으며 나 자신도 스미스 연구가들의 연구결과, 즉 스미스 자신이 사회적 질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가 취해야만 하는 적어도 20여 가지의 개입형식을 개략적으로 제시했다는 취지의 결론을 인용하기 좋아한다. 실제로 몇 년 전 스미스를 읽으면서 자유경제 자체는 상당한 정도로 경제를 둘러싼 정체政體와 문화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유사회는 자유경제만으로 이해될 수 없다는 내 본래의 직관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는 민주적 자본주의의 한 변종—같은 종의 두 유형이며, 아마도 보완적인 사촌간—이라는 주장을 미국에서 했을 때 나는 종종 사회민주주의자의 반박을 받았다. 아마도 영국에서는 이념적 구분이 보다 깊고 선명해서 현실적인 조정이 덜 위협적인 반면, 미국에서는 스스로를 (단순히 민주주의자나 혹은 자유주의자 대신) 사회민주주의자라 부르는 이들은 좌측으로 아주 멀리 가 있어서 자신들이 어떤 형태이든지 자본가라고 불리지 않아야 할 필요를 열정적으로 느끼는 것 같다.

어쨌든 폴 오머로드는 나의 신념을 숨이 막힐 정도로 너무 잘 기술하였다. 사회정의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입증된 것은 사회민주주의의 개념이 아니라 다름 아닌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다. 개인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리고, 복지 프로그램을 유지해 갈 수 있고, 보답 없는 힘든 일과 고역스런 삶으로부터 수백만을 해방시킨 것은 느리지만 꾸준한 성장을 이끌어 낸 자본주의의 능력이었다.이 이것은 사회민주주의자로서는 이상할 만큼 너그러운 평가이며 그 다음 문단에 나오는 구절 또한 그러하다. 사회정의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민주주의적 프로그램의 효과는 경제 성장에 의해 이룩된 사회정의에 비한다면 2차적인 중요성밖에 가질 수 없다.이

경제사, 사회사 부문(내 주 전공이 아니다)의 증거를 검토한 후 내 자신이 위와 같은 평가를 내렸을 때 나는 '신보수주의자'라 공격당했다. 나는 나에게 이런 이름 붙는 것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저항하였으나 어쩔 수 없음을 알고는 포기하였다. 만일 영국에서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오머로드와 같은 견해를 (있는 그대로)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십년이나 이십년 전에 비해서 같은 악보를 보며 노래를 부르는 일에 훨씬 가까워진 것이다.

신념으로서의 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자와 내가 말하는 민주적 자본주의자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오머로드가 아담 스미스를 우리들의 모델 중 하나로 인용했을 때 나는 그와 의견을 같이한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가 인간 존재에 대한 사회민주주의적 견해를 말할 때 그건 나에게 사회정책이라기보다는 종교 -인간관- 로 들린다. 나는 철학적, 종교적 토론을 대단히 좋아하며 이 철학적 견해에 관해 더 듣고 싶다. 아마도 이것이 사회민주주의에 일종의 초월성을 주면서 어떤 특정한 경험적 실험을 넘어서게 하는 요소일 것이다. 즉 그것은 시행착오, 출발과 수정, 그릇된 출발과 새로운 방향 찾기를 위해 엄청난 역사공간을 필요로 하는 비전이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그들이 틀렸다고 말할 필요가 거의 없다. 그들의 의도가 옳다는 확신에 차 있어 그저 새로운 방향으로 돌면 그만이다. 적어도 그렇게 보인다. 견해와 실천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언제라도 환영받는 듯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민주적 자본주의democratic capitalism는 덜 시적詩的이다. 민주적 자본주의자는 서로 다른 철학적 비전을 갖든지 다른 종교적 배경을 갖든지 다음의 세 가지 상호의존적인 일련의 제도 또는 체제를 확고히 받아들이는 자이다. 첫째, 민주적 정체(법의 지배 하의 제한된 정부, 권리의 보호, 견제와 균형 등), 둘째, 자본주의적 경제(세 가지의 전자본주의적pre-capitalist 특징인 시장, 사유 재산권, 자본 축적보다는 기업과 창의성에 더 큰 강조를 두면서), 셋째, 자유로운 사회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개인적인 습관을 배양하는 문화가 그것이다.

이런 점에서 민주적 자본주의는 사회민주주의보다 신념에 덜 얽매인다. 용어 자체가 사회민주주의의 경우와는 달리 인간 존재에 대한 견해를 지칭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행착오를 거치며 형성된 자유하고자 하며, 자유로운 사회에 필요한 일련의 제도를 지칭한다(아마도 어떤 범위에 속하는 제도들의 묶음을 지칭한다고 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왜냐하면 민주적 자본주의는 아주 다양하고 상이한 형식과 구조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즉 어떤 두 개의 민주적 자본주의도 똑같지는 않은 것 같다). 피터 버거는 자본주의적 경제가 민주주의의 필요조건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임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폴 오머로드도 말하듯이 그 역은 참이 아니다.

또 사회민주주의자를 민주적 자본주의자로부터 구분짓는 듯한 주제를 하나 더 지적한다면, 그 주제는 각각이 평등에 부여하는 의미와 중요성일 것이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뜻하는 평등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한계를 부여할지는 그들에게 맡겨야 할 것이다. 민주적 자본주의자에게 있어서 평등의 개념은 명확하다. 법 앞의 평등이 신분의 평등(출신이나 지위에 따른 특권의 부인)이 동등한 기회(밑에 있는 자에게 공개적이고 충분한 기회의 제공)이등은 자유롭고 훌륭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이라는 것이다.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을 치르면서 게티즈버그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명제에 헌신하는, 자유 속에서 잉태되어진 국민예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종교적, 공화적인 신념을 대변하였다. 이런 이상이 역사 속에서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피와 눈물의 대가로 현실화되어야 한다. 단순히 말해 평등이 정당하고 아름다우며 갈망하는 이상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 있다. 그러나 이념에는 위험도 따르며 주의해야 할 경기도 따른다.

토크빌은 민주주의의 핵심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다수의 힘으로 추진되어지는 평등의 이념은, 자유의 이념을 질식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매디슨은 평등을 위한 사악한 분노에 대해 말했다. 간단히 말해 우리의 경험에 따르면 평등이라는 미명 아래서 수많은 죄악이 저질러졌다. 사회적인 열정으로서 시기심은 증오보다 더 파괴적이다. 그 까닭은 증오는 누구나 다 나쁘다고 인정하지만, 시기심은 시기심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다니지 않고 평등과 공정성을 포함한 보다 고상한 이름을 붙이고 다니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평등을 향한 진정한 열정과 시기심의 차이를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대단히 유용하면서도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내 자신의 견해를 말하면 다음과 같다. 빈곤층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부유층을 끌어내리려는 노력보다 높은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첫번째 충동은 창조적인 너그러움과 찬양할 만한 평등애로부터 나오기 쉽다. 두번째 충동은 시기심과 분노, 파괴성에서 기원하기 쉽다. 물론 때로는 부자가 잔혹한 부정을 저지르고 빈곤한 자의 상태를 경멸적으로 무시하여, 복수의 소리가 정의의 소리 그 자체인 것처럼 터져 나올 수 있다. 어떤 경우엔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계급구분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가진 사회의 경우에는, 특히 사업을 통해 얻은 부가 가난한 자를 궁핍하게 만드는 원천이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유함예이란 귀족으로 태어나는 것과 같다고 상상하기가 대단히 쉽다.

사업을 통해 부자가 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태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결코 귀족이 아니었다. 그뿐만 아니다. 그들이 만든 사업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가난에서 벗어나게 한다. 불평등이란 문제라기보다는 자연적 상태이다. 그러나 인간의 위엄에 상

응하는 적당한 생활의 유지가 안될 때는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경감시킬 수 있다. 후자의 문제는 재분배보다는 모든 수준의 사람들, 특히 빈곤층에 더욱 많은 사업상의 기회를 만들어 줌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저소득층의 젊은이들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들을 교육하는 일은 중요하다.

새로운 산업, 새로운 물건,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부, 새로운 직업을 창조해 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 사회문제일 수는 없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기업이 정신을 더 적게가 아니라 더 많이 필요로 하며 모든 수준에서 필요로 한다.

나의 비판자 세 사람 모두 빈곤층의 욕구가 부자로부터의 재분배로 충분히 충족될 수 없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덧붙여 상당히 많은 빈곤층이, 그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지난 3세대 동안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기술을 배우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단을 찾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 복지국가의 일부 프로그램과 제도는 이런 성공에 기여를 했다. 다른 한편 일부 프로그램은 그저 헛돌며 자원만 낭비하고 있다. 또 일부는 확실하게 해를 끼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예외 없이 나의 비판자들은 1945년 이후 실시된 복지국가의 정책들이 우리가 배운 교훈, 새로운 조건, 새로운 필요를 감안하여 새로 검토되고 새로 구상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폴 오머로드는 1900년과 1997년 사이의 미국과 주요한 유럽 국가의 연간 성장률을 나타내는 표를 중요시하고 있다. 그것은 당연하다. 나는 이 숫자들이 여러 면에서 직관에 반하고 있다고 보지만, 나 자신이 경제학자의 훈련을 받지 않았으므로 잠정적으로는 이 숫자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오머로드 자신이 이미 몇 가지 중요한 해설을 달았다. 1900년에 이미 미국의 생활 수준은 다른 나라보다 높았다. 따라서 몇몇 유럽 국가의 연간 성장률은 대체로 더 높았지만 -특히 제2차 세계대전으로 황폐화된 직후 몇 년간- 상대적인 지위는 상당히 일정하게 지속되었다. 미국과 같이 대륙 정도의 크기를 가진 경제는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경제성장률의 증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조금씩 증대하는 것이, 그 기본값이 크기 때문에 나라 전체로는 실질적으로 큰 부를 의미한다는 점을 부가적으로 언급해 두겠다. 7조 달러의 경제가 연간 2퍼센트 성장하면 연간 1천4백억 달러가 늘어나는데, 이는 독일 전체 GDP의 10분의 1에 해당한다.

하지만 오머로드가 지적한 주요한 점은 미국보다 더 사회민주주의적인 사회가 미국보다 더 높은 연간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사실이므로, 나는 위의 사실을 해석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는 또 기술혁신을 미국에만 연결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하지만 한 가지 면에서는 내가 옳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발명, 발견, 위험추구를 선호하는 강력한 문화를 갖고 있으며, 똑같이 중요한 것으로 새로운 모험에 자

본을 투자하는 습관이 널리 퍼져 있어서 미국에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기가 훨씬 쉽다. 세계의 벤처자본 중 거의 절반이 미국에 투자되어 있고 어느 나라보다도 새로운 벤처(확립된 회사보다는)에 투자된 비율이 높다. 물론 슌페터가 말했듯 창조적 파괴이란 양날을 가진 칼이므로 이런 습관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오머로드의 나의 분석을 지지해 주는 세 가지 논점을 분명히 밝혔다. 유럽의 사업체는 미국 사업체보다 이윤획득에 더 심각한 장애를 겪는다. 둘째, 혁신하고 확장하려는 동기는 유럽에서 더 약하다. 셋째, 완전 고용을 유지하려면 유럽인은 미국인보다 일자리를 더 빠른 속도로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오머로드의 이 필요를 유럽의 생산성 증대가 높았다는 사실에 귀속시킨다. 아마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주장은 비경제학도에게 의심스런 점이 있다. 존 로이드가 지적하듯이 이탈리아의 경우 풍토병처럼 사부문에서도 과잉인력이 있다. 또 한편 부업이라는 숨은 경제도 있다. 덧붙여 유럽의 작업규칙은 미국의 회사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비효율적이다. 미국인 경영자가 이 문제에 익숙해 질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의존성과 도덕 이전의 행위

존 로이드의 주장처럼 이탈리아 좌파를 새로운 길로 이끌려는 프로디 수상의 목표는 박수를 받을 만하다는 점엔 쉽게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승리를 주장하기엔 너무 이르다. 많은 위기가 바로 앞에 놓여있다. 그리고 이탈리아 좌파 중 많은 수가 변화에 저항하고 있다. 교육을 잘 받고 똑똑한, 이탈리아의 너무나도 많은 젊은이들이 그 나라의 온난한 기후와 좋은 음식을 뒤로하고 외국으로 직장을 찾아 나서야 한다. 이탈리아에는 대처도 레이건도 없고 이들을 배출해 낼 만한 큰 정당도 없다. 만일 좌파 정당만이 복지국가를 개혁할 수 있는 게 사실이라면, 성장과 기회를 내세우는 중도우파정당에 대한 계속되는 두려움이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점도 사실이다.

훌륭한 사회과학자들이 그러하듯 내 글에 대해 평자들은 하나같이 작은 이야기거리나 사례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자신들의 설명 중 포함시킨 몇몇의 작은 이야기가 대단히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국가간 비교를 위한 통계 분석이 우리의 이해를 돕는데는 한계가 있다. 외국인으로서 내부의 시각에서 본 생활방식에 대한 느낌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도움이 필요하고, 훌륭한 이야기거리는 부분적이지만 이런 느낌을 전달해 준다. 그래서 존 로이드가 전쟁이 끝난 후 저소득층에서 태어난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으로부터 완충작용을 해 줄 뿐만 아니라, 아픈 노인을 돌보고, 무지한 젊은 층을 교육하는데 받침대 역할을 해 준 복지국가의 혜택을 받은 우리는……예이라고 썼을 때 나는 이 점을 인정하고 동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으며 또 나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았다. 그는 사회민주주

의와 복지가 단순한 추상물이 아니며 그의 삶의 본바탕과 기억 그리고 희망의 일부라는 점을 명백히 해 주었다.

다른 한편 로이드는 관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동의하는 논점에 대해서, 즉 진지하게 연구해야 할 새로운 제안(개인휴대형 연금, 의료저축 구좌, 단일(비례)세)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40년간의 경험으로부터 배운 교훈(조세제도에 한계가 있다는 점, 연금을 현재의 수준에서 유지할 수는 없다는 점, 복지국가는 근원적 재조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 많은 복지기금이 잘못 쓰여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는 점, 사회적 조직망이 얽어지고 있으며 깨어지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게 해 주었다.

반복하거나와 로이드는 과거의 좌파적인 자동적해결책 - 부유층에 대한 훨씬 높은 조세, 공적인 소유권, 국가의 계획과 강력한 노동조합을 의미했던 더 많은 사회주의어 이 더 이상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나로서는 자유시장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 오늘날에도 어떤 종류의 복지체제는 거의 언제나 필요하다는 것을 거리낌없이 인정한다. 로널드 레이건은 보수주의자를 위한 복지국가를 정당화하였다고 종종 이야기되고 있다-물론 개혁을 통해 복지국가를 제한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팽개치지는 않았다. 우리는 복지냐 아니냐의 선택이 아니라 어떤 복지여야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로이드의 지적은 옳다.

그의 논의가 보다 구체적이었다면 우리의 차이점이 나타났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로이드가 마지막 10 내지 12문단에서 말한 거의 모든 주요한 논점에 대해 동의할 수 있다. 예컨대 나는 그가 소개한 학교교육의 예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보조성의 원칙 principle of subsidiarity이 양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 -어떤 때는 상위기관의 개입이, 어떤 때는 지역기구의 활동이 더 나은 효과를 발휘한다- 는 점에 동의하는 편이다. 문제의 핵심은 한편이 다른 한편을 못쓰게 만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그가 비판하는 바와는 달리 모든 형태의 국가보조금은 의존성을 낳는다거나, 심지어 모든 형태의 의존성은 나쁘다고 나는 주장하지 않는다. 내가 어렸을 때 나는 부모님에게 의존했으며, 내가 늙으면 나는 사회보장제도와 내 자식에게 (너무 지나치지 않게)의존할 것이다. 장학금과 학비대출에서부터 정부보조에 의한 재화나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항에 대해, 나는 정부와 다른 기관에 의존한다. 어떤 형태의 의존이란 자연스러우며 건전하고 좋은 일이다. 완벽한 독립성의 자세라는 것은 대개 가식이며 자기기만이다.

하지만 복지와 관련된 의존성에 관한 논의는 다른 측면을 갖고 있다. 즉 적은 비율이지만(수적으로는 많다) 건장한 성인이 그들의 지위에 맞는, 정상적인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대체로 젊은 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사

회적 발전을 도모하지 못해 고통을 받는다. 그들의 잘못은 도덕에 관한 것이기 보다는 도덕 이전以前的의 잘못이다— 그들의 행동은 도덕적이고 사려 깊은 자의 수준에 못미치고 있다. 이는 마치 인구의 상당한 비율이 도덕 이전 단계인 일종의 활동부전活動不全 상태에 살도록 허용되고 있거나, 또는 그리하도록 유인되고 있는 것 같다(이것이 내가 말하는 노예야이다. 미국에서는 이 현상이 일어난 것은 1964년의 개혁 이후의 시기와 일치한다).

의존성이라는 그들의 어린 자식들이 그들을 믿을 수 없다는 뜻이다. 그들의 부모나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도 그들을 믿을 수 없다. 더욱이 불운한 이들은 개인적 책임을 회피하며,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예컨대 학교를 마치지 못한다) 습관적으로(때때로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자금과 공공구호 서비스에 도움을 청하며, 그 대가로 자신들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에 공헌할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받기만 하고 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 크게 보면 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모두 합해 놓으면 공공자금에는 많은 부담이 되고, 공적 생활의 혼란과 사회과학자들이 사회적 병리야라고 부르는 것에 기여하는 정도는 그 숫자에 비하면 엄청나게 크다.

두 번째 범주에 속하는 공공보조금의 수혜자들 —젊고 건강하며, 보통의 경우에는 자신의 문제를 감당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은 처음에는 복지 혜택을 받아 도움을 받고 구제까지 되었으나, 나중에는 복지혜택에 중독되어이것을 생활방식으로 받아들이며 안주하여 자신과 자신의 자식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이다. 복지 프로그램이 사람들에게 좋은 효과만을 주는 것은 아닌 듯하다. 최근에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 가운데서는, 복지혜택이 끝단지와와 같아서 일단 빠져 버리면 헤어내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복지혜택을 피해야 한다는 말이 돌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은 두 번의 예외를 제외하면 그 어떤 시기보다 많은 이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시민들은 전체적으로 일시적인 빈곤(거의 모든 이민자가 얼마 동안 처하는 상황)과 훨씬 심각하게 습관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의존성을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금전적 측면에서 어떤 가정(복지 혜택을 받든 안 받든)은 아주 가난하지만 빈곤에서 벗어나는 과정에 있을 수 있다. 반면에 재정적으로 훨씬 나은 이웃은 앞으로 고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개인적 행태(마약, 알코올중독, 일의 회피, 사생아 출산, 학교의 포기, 범죄 행위)에 빠져 있을 수 있다.

또 하나의 예를 들겠다. 최근 별거하게 되었거나 이혼하여 위기의 시기에 복지의 도움을 받은 여성의 70퍼센트 가량은 직장을 잡고 2년 안에 복지 프로그램을 떠난다. 이런 여성들은 대체로 나이가 들고 유용한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복지 프로그램은 본래의 목적대로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을 뻗어준다는 목

적대로 -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보다 어리고 덜 준비된 여성들은, 특히 결혼하지 않은 채 애를 갖고 있는 경우라면, 여러 가지 복지 프로그램에 오랜 기간동안 의존할 가능성이 훨씬 높고 이런 여성이 출산한 자녀의 건강, 교육, 안녕의 장래는 훨씬 암담하다. 이런 경우 복지제도가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해를 끼칠 위험은 보다 심각하다.

1996년의 새 복지개혁법은 일시적인 불운에 의해 당혹하게 된 사람들을 위한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위의 예에서 묘사된 의존성의 고리야를 깨뜨릴 목적을 갖고 있다. 아프거나, 불구가 되었거나, 또 다른 방식으로 영구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겐 필요가 있는 한 지원이 계속될 것이다. 1997년 가을에 시행되기 시작한 개혁의 의도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조바심을 내며 기다리고 있다.

로이드는 마지막 부분에서 '의무', '책임감', '자신과 그 가족의 행동에 대한 관심' 등의 문제에 관해 우파의 영역이라고 여겨진(모든 좌파가 그렇게 보진 않았지만) 영역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합의는 축하할 만 하며, 이 점을 주목한데 대해서 그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 하지만 비록 그것이 경향성으로 존재하긴 해도, 로이드는 좌파와 우파간에 일부의 차이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예컨대 위에서 언급했듯이 좌파는 불평등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한편으로는 찬양할 만한, 한편으로는 위험한)을 지니며, 소속감이를 일깨우는데 관심을 갖고있다(이 점에서 좌파는 우파보다 더 교회와 같다). 그리고 좌파들은 우파가 빈곤층의 운명을 빈곤층이나 박탈된 층의 매수되기 쉬운 성격이나 범죄이탈으로 돌려버린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나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겠다. 빈곤층은 종종 잘 고안된 복지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 및 교육 부문에서 그러하고, 음식물 지급 및 소득보조의 면에서도 그러하다. 이런 프로그램에 힘쓰기 위해 사회민주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다. 이런 일을 평등이때문에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품위와 적절한 기회를 주기 위해, 그리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이다. 가난한 여성의 가운데 어떤 재능이 숨겨져 있는지 누가 알겠는가? 대다수의 신보수주의적 친구들은 로이드처럼 한때는 가난한 청년들이었으며 복지 프로그램의 도움도 받았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적어도 미국에서는 1964년 이후의 빈곤과의 전쟁이프로그램보다는 일반적으로 더 잘 짜여져 있다.

빈곤층은 누구인가?

앤서니 기든스의 훌륭한 비판에 대해 얘기할 바가 적다. 왜냐면 그의 논점은 이미 많

이 다루어졌기 때문이며, 또 그의 비판은 함의점을 깔끔하게 정리하였기 때문이다. 그의 마지막 문단은 특히 보석처럼 아름답게 쓰여졌으며 내가 그렇게 썼으면 하고 바랄 뿐이다. 나는 그가 유럽과 미국 사이에 존재하는 복지국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대해 지적한 두 번째 문단도 좋아한다. 둘 사이의 간극은 그가 말했듯이 넓다. — 그러나 대서양 양편에서 일어나는 반성의 움직임은 이 심포지움이 잘 나타내고 있듯이 우리를 훨씬 가깝게 만들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기든스가 어처구니없다고 말한 구절을 내가 썼을 때, 즉 복지국가는 우리를 타락시킨다고 썼을 때, 아마 한 두 가지의 이야기거리를 말했다면 내가 전하려고 했던 인식이 분명해졌을 것이다. 미국에서 어느 젊은 교수가 취업 인터뷰를 받았다. 그는 학장으로부터 그가 취직될 것이 확실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인터뷰가 계속되어도 놀라지 말라는 말도 들었다. 왜냐하면 학과에서는 다른 모든 후보자에게도 필수적인 과정을 다 거치게 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했다는 기록을 남겨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바로 그 교수가 다른 학교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자리는 소수민족이나 여성에게 할당되었다는 말을 들었고, 만일 그가 인터뷰에 응한다면 그들의 기록 상 좋기 때문에 그가 인터뷰에 오는 일을 환영한다는 말도 들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1960년대에 하버드 졸업생이 복지혜택을 받았다면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 당시에 받을 수 있던 혜택은 하버드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오늘날 일년 또는 이년을 일하고 나서 실업수당을 받으며 산에 가서 휴식을 취하는 젊은이 — 심지어 대학생까지 — 를 만나기란 쉽지 않다. 이 새로운 태도는 아주 다르다. 혜택이란 타내야 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 장애인 수당을 신청하려면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의사는 냉혈적인 의사일 것이다. 자동차, 의료 그리고 다른 형태의 보험에 끼워 넣기가 다반사로 일어난다. 별것도 아닌데 무언가를 받아내는 일은 어디서나 인간을 타락시킨다. 이렇게 명백한 사실을 내가 일반화했다고 해서 비판을 받는 것이다. 그렇지만 기든스도 내가 논급하려 했던 바를 곧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형태의 복지국가에 있어 복지의존과 복지기만은 현실적인 문제이며 만연하고 있다. 이나는 좌파의 사람들이 우파의 관점으로 들리는 논점을 얘기하려고 할 때는 그들은 종종 우파를 먼저 공략함으로써 좌파의 동료들에게 먼저 자신들의 본심을 입증하려 한다는 사실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기든스 교수는 미국에 많은 수의 일하는 빈곤층이 있으며, 하위 25퍼센트는 지난 20년 동안 그들의 실질 임금이 정체하고 있음을 보았다고 주장한다. 이런 글귀가 습관적으로 보도되는 모습들 중 일부가 된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모습에 반대되는 상황을 말해 줄 증거는 많이 있다. 빈곤층 세대주 중 3분의 2는 여성이며 이들 중

반은 미망인이고 다른 반은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의 어머니이다. 이들 중 아주 일부만이 일년 내내 정규직을 갖고 있다. 간단히 말해 빈곤층의 구성은 50년 전 심지어는 30년 전하고도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시와 비교할 때 결혼한 상태에서 정규직을 지닌 남성 세대주가 빈곤층인 경우는 훨씬 적다. 빈곤층 전체 중 일년 내내 정규직을 가진 사람의 비율은 1996년의 경우 크지 않았다이 겨우 2.3퍼센트였다.

또 하위 25퍼센트라면 대략 2만2천 달러나 그 이하의 소득(1996년)인 모든 가구를 포함한다. 지난 20년 동안의 대다수 소득계산은 두 가지 결함을 갖고 있다. 첫번째로 혜택, 특히 고용주의 부담과 피고용인이 받는 가치가 지난 20년 동안 임금의 상승보다 훨씬 빨랐던 의료보험 혜택은 계산에서 빠져 있다. 최근의 노동조합 단체 협상도 임금 이외의 혜택에 관한 것이 많다.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을 계산한, 따라서 실질임금을 계산한 척도가 변화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 이 결과 인플레이션은 일년에 1퍼센트 이상 과대평가되었다. 합쳐 놓으면 이 두 가지 결함은 널리 알려진 경기 침체가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까닭을 설명해 주는데 도움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든스가 말하듯이 소위 미국경제의 황금기가 순수한 성공은 아니다. 1979~1981년 사이의 3년 동안 두 자리 숫자를 기록한 심각한 인플레이션은 실질임금, 특히 고정수입을 가진 사람들의 실질임금을 크게 삭감시켜 버렸기 때문에 지속적인 실질성장을 통해 손실(거의 50퍼센트의 구매력 상실)을 회복하는 데만도 10년 이상이 걸렸다. 이것이 하위층, 무엇보다도 고정 수입을 가진 층에 큰 타격을 주었다(이와는 대조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한, 지나치게 관대한 조치는 이것에 따라 지표화 된 사회보장을 받는 층의 소득을 적절한 수준 이상으로 올려놓았다).

나는 향수nostalgia에 대한 기든스의 경고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기든스가 소개한 가정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그러나 향수가 가정에 대해 내가 말하고자 했던 바는 아니다. 나는 전통적인 가치를 옹호하고 있지 않다. (또한 오늘날의 보다 '진보적인' 세계에서는 과거보다 가정 내 폭력이 적다는 점에 대해 기든스와 같은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 내가 말하고자 한 바는 만연하는 이혼, 별거, 사생아 출산, 10대 임신 등 최근의 사회적 변화에 따른 막중한 공공비용이었다. 미국의 경우 가장 급속히 증가한 빈곤층 집단은 아버지 없는, 홀어머니와 아이들의 가정이었다. (이 서술은 중립성을 유지하려고 하면서도 여성이 아니라, 남성의 무책임과 비행이 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주제는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하는 간단한 형식에 따라 논의하기에는 너무 미묘하고

복잡한 주제이다. 독자께서는 이 논문의 서론에서 언급한 연구를 보기 바란다.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태어난 어린이의 상당수에 대한 예측을 보면, 온전한 부모를 가진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예측에 비교할 때, 이들은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좋은 영향을 주지도 못하고 공공기금의 지출도 크게 요구할 것이다. 두 가지 가정형태가 의미하는 상대적인 도덕적인 장점이 무엇이든 간에, 이 기록을 검토하는 모든 사람이 취해야 할 정책적 선호는 분명해 지고 있다.

기든스는 내가 제시한 명제의 일부에 대해 냉정하지만 공정한 평가를 내렸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남겨진 폐허에 직면하여 거둔 사회민주주의의 위대한 업적을 지적하고(내가 했어야 했다), 당시 유럽의 위대한 기적~~을~~을 지적했다. 그가 우리의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주의의 해체와 사회민주주의의 낙후성~~에~~에 대해서 쓸 때, 또한 그가 복지국가에의 긴급한 개혁을 지도할 다섯 가지 원칙을 열거할 때, 그는 내가 더듬어 찾고 있던 바를 거장의 필치로 서술하였다. 나는 그의 다섯 가지 원칙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원칙은 내 자신이 애써 찾아 헤매던 바를 대단히 잘 추적하여 정리했다.

간단히 말해 비평가들은 누군가 꼭 말해야 할 바를 말로 표현해 주었으며 내 자신이 한 것 보다 더 잘해 주었다. 더욱이 이들은 좌로, 우로 움직이면서 실질적인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들은 우리가 지난 수 십 년 동안 했던 토론보다도 잠재력이 더 큰 생산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었다. 이들은 대서양 양편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만하다.

제3의 길 이야기

1999년 2월 12일 1판 1쇄 발행

2020년 6월 11일 1판 2쇄 발행

저자_마이클 노박

역자_박종찬

발행자_최승노

발행처_자유기업원

주소_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9

전화_02-3774-5000

팩스_0502-797-5058

비매품